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평화인문학연구단 국내학술회의

한반도 녹색평화의 이론적 탐색과 실천

2012. 6.14(목) 13:30~17:3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일정표 |

13:30~13:40 개회사

13:40~15:10 **1회의 : 사상과 이론**

사회자 권영민(단국대 석좌교수)

발 표 **한국의 전통적 생태사상과 평화주의 - 홍대용의 경우**
박희병(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토 론 이도원(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발 표 **발전의 지속가능성**

박영준(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교수)

토 론 윤여창(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15:10~15:30 휴 식

15:30~17:30 **2회의 : 쟁점과 실천**

사회자 김광역(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발 표 **생태민주주의와 반핵운동**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

토 론 이상현(한신대 교양학부 교수)

발 표 **한반도경제: 조직원리 · 구성요소 · 프로젝트**
이일영(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토 론 안병옥(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발 표 **1980년대 독일 녹색당의 평화 구상과 통일 정책**
이동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토 론 하승수(녹색당 사무처장, 변호사)

| 목 차 |



1회의 사상과 이론

- 발표 1 한국의 전통적 생태사상과 평화주의-홍대용의 경우 09
박희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발표 2 발전의 지속가능성 19
박영준 (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교수)



2회의 쟁점과 실천

- 발표 1 생태민주주의와 반핵운동 27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 발표 2 한반도경제: 조직원리 · 구성요소 · 프로젝트 45
이일영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 발표 3 1980년대 독일 녹색당의 평화 구상과 통일 정책 61
이동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1회의 사상과 이론

- 발표 1 한국의 전통적 생태사상과 평화주의-홍대용의 경우
박희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발표 2 발전의 지속가능성
박영준 (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교수)

한국의 전통적 생태사상과 평화주의 - 홍대용의 경우

박희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생태주의와 평화주의는 그 본질에 있어서 밀접하게 연관된다. 생태주의는 그 핵심에 평화주의적 지향을 간직하며, 평화주의는 그 근저에서 생태주의적 감수성이 요청된다.¹⁾ 이 점에서 이른바 ‘녹색평화론’은 오늘날의 문명과 세계가 봉착한 문제를 풀기 위한 주요한 사상적·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생태주의와 평화주의의 관계, 녹색평화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은 서구학계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서구발 녹색평화론을 경청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비서구권에서도 그 문화적 전통 속에 내재된 생태주의적 및 평화주의적 지향들을 찾아내어 이를 이론화함으로써 세계가 봉착한 문제의 해결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생태주의와 평화주의를 결합시키는 작업에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전근대 시기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평화주의적 사유와 실천을 주목하고 재조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비록 녹색평화론이 다루는 문제가 근대의 문제이기는 해도, 전근대의 경험과 사고를 경청하면서 거기서 많은 시사를 구하려는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현금 요청되는 녹색평화론은, 특정문화권의 특권화 및 근대의 특권화의 철폐를 전제로 삼지 않으면 안되며, 개방성과 다양성, 자기중심성의 부정 위에서 추구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본 발표에서 한국의 전통적 생태사상과 평화주의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담헌 홍대용의 경우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1) 생태주의와 평화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희병, 「생태주의와 평화주의」, 『녹색평론』 80, 2005년 1-2월에서 한 차례 언급한 바 있다.

2. 홍대용의 존재론: 人物均

홍대용은 이른바 ‘인물균’(人物均) 사상을 펼쳤다. ‘인물균’은 ‘인’(人)과 ‘물’(物)이 평등하다는 주장이다. ‘물’은 인간 이외의 일체의 동식물을 말한다. 홍대용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보다 사람이 귀하게 마련이지만, 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보다 물이 귀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하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과 물은 똑같다라고 말했다.²⁾ 이는 새로운 존재론의 개진이다.

유학은, 비록 그것이 근대인의 인간중심주의만큼 지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해 있다. 홍대용은 이런 유학의 인간중심주의를 근본적으로 반성하면서, 인과 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재구성, 고쳐 말해 새로운 세계관의 구성에 다르다. 홍대용 사상의 평화주의적 면모는 인물균이라는 이 독특한 존재론에 의해 정초되어 있다.

홍대용의 존재론은, 인간의 자연내 지위를 상대화시키면서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들에 인간과 균등한 가치를 부여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 존재론은 인간의 입장이나 물의 입장이 아니라 이 양자를 지양한 입장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이것이 곧 홍대용이 말한 ‘천’(天)의 입장이다. ‘천’의 입장에서는 인간중심주의도 물중심주의도 모두 성립될 수 없으며, 인간과 물은 근원적으로 균등한 존재다. 그렇다면 이 ‘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장자적(莊子的) 관점에서 본다면 이 천은 바로 ‘도’를 의미할 것이다. 『장자』의 「추수」편(秋水篇)에 보면 이런 말이 보인다: “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物)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나 물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귀하고 상대방이 천하다.”(以道觀之, 物無貴賤; 以物觀之, 自貴而相賤) 주지하다시피 『장자』에서 도라는 것은 모든 차별과 대립과 구분을 넘어선 궁극적 지경(地境)을 뜻한다. 모든 존재는 이 도에서 유래하고, 도에 포괄되며, 도에 귀속된다. 그러므로 이 도는 존재와 현상의 비차등성(非差等性)을 담보하며 특정 존재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궁극적 원리이다. 그것은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의미의 ‘자연’(自然) 바로 그것이다. 도, 즉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존재에 우열과 귀천과 상하는 없으며, 만물은 제동(齊同)이다. 홍대용이 말한 ‘천’은 이런 장자적 의미의 ‘자연’에 비추어 이해될 수도 있을 터이다.

홍대용은 기철학자(氣哲學者)였다. 그는 기철학의 견지에서 하늘을 이렇게 규정한 바 있다: “하늘은 기(氣)일뿐이요, (...) 만물은 기(氣)의 조박(糟粕)이다.”³⁾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땅은 만물의 어머니요, 해는 만물의 아버지며, 하늘은 만물의 할아버지다.”⁴⁾ 중국의 기철학자 장재(張載)는

하늘을 ‘태허’(太虛)로 규정한 바 있다. 태허는 텅 비어 있으되 만물을 낳으며 만물의 근원이 되는 세계의 제1원리에 해당한다. 그것은 기(氣)임과 동시에 기(氣)의 궁극적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자생자화’(自生自化)를 속성으로 한다. 이 점에서 태허는 『장자』의 자연과 상통한다. 홍대용이 말한 ‘천’은 기철학에서 운위되는 이 ‘태허’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중요한 것은, 인간중심주의를 허물면서 인간 외 다른 생물의 가치를 본원적으로 인간과 대등한 것으로 재규정하는 홍대용의 존재론은 오늘날의 근본 생태주의와 상통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홍대용의 존재론은 일종의 ‘자연철학’임과 동시에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적 재구성, 즉 새로운 ‘세계관’의 기획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활물’(活物)로서의 지구: 존물적(尊物的) 관점

홍대용은 지구를 하나의 활물(活物), 즉 살아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지구는 활물이다. 맥박과 경락, 영위(營衛)⁵⁾가 실상 사람의 몸과 같은데, 다만 그 몸뚱이가 크고 무거워 사람처럼 뛰고 움직이지 못할 뿐이다.”⁶⁾ 또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대저 지구는 허계(虛界)의 활물이다. 흙은 그의 살이고, 물은 그의 정기와 피이며, 비와 이슬은 그의 땀이고, 바람과 불은 그의 혼백이며 영위(營衛)다. 그러므로 물과 흙은 안에서 빛어내고, 태양의 화기(火氣)는 밖에서 쪼이므로, 원기(元氣)가 모여 온갖 물(物)을 낳는다. 풀과 나무는 지구의 모발이고, 사람과 짐승은 지구의 벼룩이며 이[蠢]다.”⁷⁾

이에서 보듯 홍대용은 지구를 그 전체로서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물(物)에 대한 인간의 일방적 지배와 이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 물 역시 생명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 점에서 인간과 다를 바 없다. 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그 자체가 존재의 이유인 것이다. 풀과 나무, 그리고 온갖 동물들은 인간과 함께 ‘지구공동체’의 일원이다. “풀과 나무는 지구의 모발이고, 사람과 짐승은 지구의 벼룩이며 이[蠢]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홍대용에게 있어 물은 한갓 타자(他者)가 아니다. 지구 위에서 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체인 것이다. 이에서 존물(尊物), 즉 물에 대한 존중이 생겨난다. 지구적 관점에서 볼 때,

5) 한의학에서 영혈(營血)과 위기(衛氣)를 이르는 말. ‘영혈’은 인체의 영양을 조절하여 원기를 왕성하게 하는 혈액이고, ‘위기’는 땀구멍을 여닫으며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면서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양기(陽氣)를 말한다.

6) 같은 책

7) 같은 책

2) 『의산문답』

3) 『철산문답』

4) 위의 책

나아가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과 물은 각기 서로 대등한 하나의 주체이며, 다 함께 존재의 근원에 맞닿아 있다. 홍대용의 이런 존물적 관점 속에는 인간과 물의 상생과 공생을 위한 높은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4. 기화(氣化)와 형화(形化): 인간에 의한 자연 수탈의 유래

홍대용은, 인간과 물(物)의 형성에는 기화(氣化)와 형화(形化) 두 종류가 있는데, ‘기화’는 순전히 기(氣)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고, ‘형화’는 암수의 교접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⁸⁾ 상고 시대에는 오로지 기화만 존재했기 때문에 인간과 물이 많지 않았으며, 둘은 서로를 해치는 일 없이 화락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었다고 본다. 이 단계의 인간은 욕심도 없고, 물(物)에 의뢰할 필요도 없었으니, 조수(鳥獸)와 어별(魚鼈)이 모두 제 마음대로 살고 초목과 금석(金石)도 각각 제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했다.⁹⁾ 이처럼 홍대용이 그려 놓고 있는 상고시대는 인간과 물이 서로를 해치지 않고 각각 자족적으로 생을 영위하는 세계다.

하지만 중고(中古)로 내려와 ‘형화’가 생기면서 ‘기화’는 끊어졌다. 이에 따라 인간과 물의 수가 늘어나고, 정욕이 생기게 되었으며, 인간과 물은 각각 제 몸을 위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은 음식과 의복과 주거를 위해 물을 마음대로 약탈했는데, 그 때문에 조수와 어별이 제대로 살 수 없게 되었고, 초목과 금석이 형체를 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상고시대가 보여주던 인간과 물의 화락한 관계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¹⁰⁾

이처럼 홍대용은 중고시대에 접어들면서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대두하고, 기교(奇巧)한 피가 나타나며, 인간에 의한 자연의 수탈이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¹¹⁾

홍대용이 관념한 상고시대는 신화적 상상력의 소산이며, 실제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홍대용이 ①욕망, ②인간의 자기중심성, ③인세(人世)의 문명화, ④인간에 의한 자연의 수탈, 이 넷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5. 자연수탈과 지배/피지배 관계의 상관성

흥미로운 점은, 홍대용이 인간의 자연수탈이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와 수탈을 낳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¹²⁾ 인(人) 대 물(物)의 관계가 인(人) 대 인(人)의 관계로 전이(轉移)됨에 대한 통찰이다.

홍대용은 지배/피지배 관계와 정치 권력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에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욕심 많은 자가 그 중간에 나서 제 마음과 같은 자를 이끌어 각각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되며, 약한 자는 수고롭게 일하고, 강한 자는 그 이익을 누렸다. 땅을 쪼개어서 서로 차지하려고 눈을 부라리며, 무기를 갖고 싸우고 주먹을 뻗쳐 육박전을 벌이니, 마침내 백성의 삶을 해치게 되었다.¹³⁾

군장(君長)과 국가의 탄생 과정을 그리고 있다. 욕망에 의한 소유의 발생과 인간의 자연에 대한 수탈이 마침내 국가와 지배자=군장(君長)을 낳게 되고, 폭력을 초래하게 됐다고 홍대용은 보고 있다. 욕망, 소유, 자연수탈, 지배, 피지배, 국가, 폭력, 군장(君長) 등의 발생 과정 및 그 상호연관성에 대한 홍대용의 사회학적 통찰은 대단히 뛰어난 것이라 할 만하다.

홍대용은 이에 더해 다음에서 보듯 무기의 탄생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교(巧)한 자가 재주를 부려 살기(殺氣)를 도발하였다. 쇠를 정련하고 나무를 쪼개어 흥기를 만들었다. 날카로운 칼과 창, 흉악한 활과 화살로 성을 다투고 땅을 다투매 시체가 들을 가득 덮었다. 인민의 재앙이 이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¹⁴⁾

요컨대 홍대용은 인간과 물의 본래적 관계인 ‘인물균’이 인간의 문명화 과정에서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그 결과 인간 사회의 불평등과 폭력, 착취, 지배/피지배, 전쟁을 낳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8) 같은 책
9) 같은 책
10) 같은 책
11) 이상의 서술은 박희병, 「담헌 사회사상의 논리와 체계」(『담헌 홍대용의 실학사상』, 성균관대 출판부, 2012년 6월 간행예정)에서 가져온 것이다.

12) 이하의 서술은 박희병, 「담헌 사회사상의 논리와 체계」에서 가져온 것이다.
13) 『의산문답』
14) 위의 책

6. 반전(反戰)

홍대용은 적이 침략해 오면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전쟁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즉, 홍대용은 침략전쟁에 반대했다. 홍대용의 다음 말들이 참조된다.

(가) 병법은 싸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싸움 좋아하는 것이 가장 나쁘다.¹⁵⁾

(나) 행군하는 군사는 험지에서 피곤하고, 백성은 짐 실어 나르는 데 지친다. 이기면 군사가 반은 상하고, 이기지 못하면 국토를 도리어 잃게 된다. 그리고 기근이 따르게 되어 적국이 틈을 엿보게 된다. 성인(聖人)이 전쟁을 취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¹⁶⁾

(다) 해자를 설치해 놓고 강함을 다투다가 사상자를 반이나 내는 것은 병법의 재앙이며, 성을 공격하고 땅을 공략하여 백 번 싸워 다 이기는 것은 병법으로서 하위(下位)다. 인의(仁義)가 나라 안에 행해지고 적국(敵國)도 밖에서 쉬게 되어 싸우지 않고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이 곧 성인(聖人)의 사람 살리는 도구이며, 병법으로서 최선이다.¹⁷⁾

이들 예문에서 알 수 있듯 홍대용은 전쟁을 일으키는 일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가간의 분쟁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침략전쟁에 대한 반대 의사는 『의산문답』에도 표명되어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자기의 것이 아닌데 취하는 것을 ‘도’ (盜)라 하고, 죄가 아닌데 죽이는 것을 ‘적’ (賊)이라 한다. 사이(四夷)가 중국 땅을 침략하는 것을 ‘구’ (寇)라 하고, 중국이 무력을 남용해 사이(四夷)를 치는 것을 ‘적’ (賊)이라 한다. 그러나 구(寇)와 적(賊)은 똑같다.¹⁸⁾

중국 주변의 국가가 중국을 침략하는 일이든, 중국이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일이든 모두 똑같은 도적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이유에서든 타국의 영토를 공격하거나 무력으로 점거하는 일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홍대용의 확고한 반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반전

주의는 전근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아주 휘귀한 것으로, 동아시아인이 공유하는 중요한 지적 자산으로 삼을 만하다.

7. 주체와 타자의 관계: 평화주의의 이론적 정초(定礎)

‘평화’는 소극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 점에서 홍대용의 반전주의는 평화를 위한 중대한 사상적 진전을 이룬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닌 좀더 다양한 함의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평화주의’라는 말에는 전쟁에 대한 반대가 당연히 그 주요한 덕목으로 포함되면서도 그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근본적이고 원대한 지향과 태도, 이념이 담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주체와 타자에 대한 홍대용의 사유는 주목을 요한다.

홍대용은 ‘화이일’ (華夷一), 즉 ‘중화와 오랑캐는 똑같다’라는 사상을 주창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중화’는 전통적으로 세계의 중심이자 문명국가로 간주되어온 한족(漢族)의 중국을 가리킨다. ‘오랑캐’는 중국 내부에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중국 바깥의 국가들을 가리킨다. 전통적으로 ‘오랑캐’는 금수와 비슷한 존재이거나 인간=중국인과 금수 중간쯤에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오랑캐에는 중국과 같은 예법(禮法)이나 문명이 없다고 보아서다.

홍대용은 몇천년간 동아시아를 규율해온 지배적 세계관인 ‘화이론’ (華夷論)을 ‘화이일’의 테제로 단박에 깨부숴 버리고, 종족·인종·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를 구축해 냈다. 홍대용에 의하면 문명의 차이는 단지 차이일 뿐 거기에 무슨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몸에 문신을 하는 나라의 사람이나 중국처럼 머리에 모자를 쓰는 사람 사이에 우열은 없다. 그것은 각국의 습속(習俗)일 뿐이다. 따라서 모자를 쓰는 나라의 습속을 기준으로 삼아 모자를 쓰지 않고 문신을 하는 나라의 습속을 야만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홍대용이 제기한 ‘화이일’의 테제는 일차적으로 당시 조선 지식인이 오랑캐로 간주한 청나라를 긍정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사상적 내포는 단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선과 일본, 기타 중국 주변의 여러 나라들, 나아가 서양 등도 ‘오랑캐’로 간주되었음으로써다. 그러므로 ‘화이일’이라고 했을 때는 중화나 청에 대한 숙고만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숙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이일’은 조선을 열등한 타자가 아니라 떳떳한 주체로 정립시키는 논리적 기초가 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이일’은 중국을 유일한 주체가 아닌 여러

15) 위의 책
16) 위의 책
17) 위의 책
18) 위의 책

대등한 주체 가운데 하나로 재정립시키는 논리가 되고 있다. 말하자면 ‘화이일’은 비록 이론적 차원이기는 할지라도, 국제관계에서 국가간의 평등성을 뒷받침하는 면모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

홍대용이 구상한 세계는, 하나의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망 속의 여러 주체가 더불어 공존하는 형국이다.¹⁹⁾ 이 경우 주체와 다른 주체(들)은 평등한 관계에 있다. 이 말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억압하거나, 침략하거나, 야만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하나의 주체가 다른 주체(들)보다 우위에 있음이 인정되지 않으며, 특정 주체의 자기중심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남’이 ‘나’를 깔보거나 멸시하거나 유린해서도 안되지만 ‘나’가 ‘남’을 깔보거나 멸시하거나 유린해서도 안된다. ‘화이일’의 사고 체계 속에서는 어떤 주체에게도 그런 정당성이 허여되지 않음으로써다.

이 점에서 홍대용이 사유한 ‘주체’는 자고자대(自高自大)의 주체나 자기를 중심으로 간주하는 주체가 아니라, 겸손하며 관계적인 주체다. ‘관계적’이라고 한 것은 상호인정과 상호존중을 견지하기 때문이다. 홍대용에 의해 구상된 이런 주체 개념은 서유럽의 근대 민족주의의 주체 개념과는 그 내질(內質)이 다르다. 후자는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적이며 팽창적인 지향이 두드러지지만, 전자에서는 그런 것이 지양되어 있다. 또한 서유럽에서 창안된 민족주의 이념은 중심과 주변, 문명과 야만, 주체와 타자를 늘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억압적·지배적 양상을 띠지만, 홍대용의 이론에서는 중심과 주변, 문명과 야만, 주체와 타자를 폭력적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다. 모두가 중심이며, 모두가 평등한 주체로 간주됨으로써다.

바로 이 점에서 홍대용의 주체 개념은 정치적·윤리적·문명적·국제적 차원에서 ‘적극적 의미의 평화’를 정초하고 있다고 할 만하다. 그것은 자기중심성의 지양(止揚)을 통해 얻어진 자기성찰과 겸손을 토대로 상대방의 다른 점을 인정하며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주체인 것이다. 주체들간의 이 상호존중을 통해 획득되는 것은 공존과 공생이다. 한 마디로 말해, 홍대용에 의해 구상된 주체의 성격 및 주체들의 상호관계는 평화적 태도에 기초해 있으며, 평화로 귀결된다.

‘화이일’은 ‘인물균’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다. 다시 말해 ‘인물균’의 논리적 확대가 곧 ‘화이일’이다. 이 점에서 ‘화이일’은 ‘화이균’(華夷均)이라 바꿔 말해도 무방하다. 인물균이 물아의 자기중심성의 지양 위에서 비로소 성립되듯, ‘화이균’ 역시 물아, 즉 ‘나’와 ‘남’의 자기중심성의 지양 위에서 성립된다. 이 자기중심성의 지양은, 생태주의에서 출발해 마침내 원대한 의미의 평화주의를 정초해 내고 있다. 바로 이에서 홍대용 사유 속의 생태주의와 평화주의의 깊은 내면적 연관이 잘 확인된다 하겠다.

19) 이런 생각은 박희병, 『홍대용 사상에 있어 物의 상대성과 동일성』(『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1999 所收)에서 처음 개진되었다.

8. 맺음말

이상으로 생태주의에서 평화주의에 이르는 홍대용 사유의 논리적 전개과정을 더듬어 보았다. 홍대용의 이런 생태평화론은 당대의 조선과 동아시아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물이다. 다시 말해 단순한 관념적 요구의 소산이 아니라는 말이다. 홍대용은 허위적이고 공허하며 진부하기 짝이 없는, 주자학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 조선의 학문 현실에 누구보다 깊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부단한 학문적 자기갱신과 자기성찰을 통해 새로운 학문과 세계관을 구상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인물균’이며, ‘화이일’이다. 시대를 뛰어넘는 이 놀라운 테제들은 홍대용 최만년의 저작인 『의산문답』에 포함되어 있다.

홍대용이 기존의 학문을 부정하고 새로운 학문을 모색한 것은 궁극적으로 세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함과 동시에 조선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진실된 학문만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봤음으로써다.

이 글에서는 미처 언급하지 못했지만, 홍대용의 사유 속에는 정치적·경제적·교육적 ‘평등’에 대한 지향이 아주 강렬하다. 그는 ‘만민개로’(萬民皆勞)를 주장함으로써 무위도식하는 양반층을 도태시키려 했으며, 인민들이 평등한 물질적 기초 위에서 향산(恒産)을 도모할 수 있게끔 균전제(均田制)의 시행을 구상했고, 평민들에게까지 교육의 문호를 개방하여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인재 등용 방식을 구상함으로써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벽을 허물어 기존의 신분제를 해체하고자 꾀하였다.²⁰⁾

한편, 홍대용은 절검(節儉)을 지극히 강조하고, 박애(博愛)를 표방하였다. ‘절검’은 홍대용의 ‘존물적’(尊物的) 태도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한갓 구호가 아니며 그가 견지한 세계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홍대용에게 있어 절검은 정치와 문명의 건강성과 수발(秀拔)함을 보여주는 잣대이기까지 하다. 또한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의 사치를 비판하고 검소한 삶을 산 군주를 평가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듯, 절검에 대한 홍대용의 강조는 인민의 좀더 나은 삶에 대한 그의 열의와도 무관하지 않다.²¹⁾

만년의 홍대용에게서 보이는 ‘박애’의 표방은 ‘화이일’ 사상의 윤리적 실천이라 볼 만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 홍대용의 사상 속에는 ‘생태평화주의’라 할 만한 담론의 계기들이 아주 풍부하다. 이 계기들은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는 오늘날의 한국에 긴요한 이론적·사상적 원천을 제공한다. 또한 홍대용의 사상적·학문적 모색 과정과 자세 및 태도는 21세기 현재

20) 서상(敘上)의 점에 대해서는 박희병, 『담헌 사회사상의 논리와 체계』에서 자세한 논의를 펼쳤다.

21) 홍대용의 사상에서 ‘절검’이 갖는 의미는 박희병, 위의 논문에서 자세히 논의했다.

생태평화론을 수립하려는 학자들에게 적지 않은 시사를 주며, 하나의 지적 귀감이 된다고 생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홍대용 사상 내부의 생태평화주의적 지향은 한국이라는 지역을 넘어 동아시아인과 전세계인들에게도 소중한 지적 자산이 될 만하며, 장차 생태평화주의의 이론적 심화와 전지구적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1회의 발표2

발전의 지속가능성

박영준 (서울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소장, 교수)

1. 머리말

‘지속가능발전’은 지속, 가능, 그리고 발전이라는 세 가지 단어의 조합이다. 지속이라는 시간 스케일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무엇을 발전이라고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것이다. 과거 인류의 문명사적인 발전은 천년 스케일이지만, 현재 석유자원의 관점에서 보면 50년-100년 정도가 지속가능한 시간 스케일이 된다. 그리고 태양계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짧아도 천만년 정도는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간 스케일에서는 지구의 자전 속도는 느려지게 될 것이고, 지구의 자장이 줄어들어 우주의 방사선을 막을 수 없어서 지속 가능이라는 테마는 다른 차원을 가질 것이다.

발전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혹자는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할 것이고, 혹자는 정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는 이러한 소비를 발전이라기 보다, 큰 순환계를 교란시키는 물거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 법체계를 만들어 인간 개인의 존엄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발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류의 어떠한 성취도 정보와 에너지, 그리고 물질의 사용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점을 간과할 수 없다.

1987년 환경 및 개발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세대가 그들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측면을 50년-100년 시간 스케일, 그리고 물질, 정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기초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2. 물질과 정보 사이클

인류의 발전은 기술 발전의 역사이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나 현재 스마트폰 시대에서나 인류는 기구를 발전시키면서, 손을 움직였으며 이 손의 정교해 짐을 따라서 두뇌, 특히 대뇌 피질이 진화되어 왔다. 대뇌 피질의 진화는 인간에게 이미지의 모델화, 추상화라는 선물을 주었다. 인류 문화는 기술의 발전과 추상화라는 두개의 선 순환 피드백의 선물이다.

기술의 발전을 다르게 말하면, 물질과 정보의 순환 속도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다. 인류는 두 가지 순환 속도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순환 속도의 증가는 과학자들이 흔히 표현하듯이 지수함수적인 증가 형태를 따른다. 금년의 순환 속도가 작년의 속도보다 몇 %씩 계속 증가한다는 뜻이다. 마치 복리가 붙듯이 말이다. 이러한 지수 증가가 현대의 특징만이 아니다.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보여주는 인류 문명의 속성같은 것이다.

문제는 물질과 정보의 순환 속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데 있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거꾸로 물질의 순환이 또한 필요한데, 이 물질 순환계의 부산물 중의 하나가 CO₂이다. 그런데 CO₂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요인(show stopper)이 되고 있다. 또한 저해 요인이 50년 내지 100년 정도라는 시간 스케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1) 물질

열역학은 물질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쓸만한 에너지(free energy)와 자연스러운 에너지(쓸 수 없는 에너지; 온도, 그리고 엔트로피)로 구성되어, 항상 자연스러운 상태로 변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만약 태양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구는 결국 완전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변화하여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는 곳이 된다. 외계에서 들어오는 쓸만한 에너지(빛 에너지) 덕분에 지구에는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물질은 모두 다른 물질과 결합(특히 산소)하거나 섞여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존재하려고 한다. 인류의 문명은 이 자연스러운 물질에 에너지를 가해서, 원하는 물질로 바꾸는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원하는 물질은 천천히 에너지를 내어 놓고, 자연스러운 상태(쓰레기)로 되돌아 간다. 이러한 사이클을 물질 사이클이라고 하자. 예로 제철 산업은 자연스러운 물질(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물질)인 산화철등을 가져다가 탄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떼어내고 순수한 철강을 추출한다. 이때 CO₂가 부산물로 나오게 된다.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약 500kgce(ce: Carbon Equivalent)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제철 산업은 물질 순환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CO₂를 배출하는 행위이다. 제철의

산업의 발전은 결국 이 순환 속도를 증가시켜, Fe를 많이 생산해 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두 가지이다. 자연스러운 물질의 매장량이 빠르게 바닥이 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물질 순환 속도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가 매년 지수 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50년을 기점으로 보면 많은 물질들의 수요량이 매장량에 가까이 가거나, 몇 배씩 넘어가는 물질이 대부분이다. 철, 몰리브덴, 텅스텐, 코발트, 플라티늄, 플라듐 모두 매장량 소진에 가까이 갈 것이고, 티켈, 망간, 리튬, 인듐, 갈륨, 그리고 구리, 아연, 금, 주석 등 또한 매장량이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을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CO₂ 저 배출 산업, 즉 즉 배터리, 태양광 산업을 지탱할 재료 매장량 모두가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2) 정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정보는 곧 경쟁력이고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정보 자체의 질과 양은 순환 속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정보, 순환 속도의 증가는 에너지 순환을 동반한다.

현대 정보 혁명을 이끈 반도체와 통신 기술은 이 정보의 저장, 그리고 전송에 전자와 빛(혹은 전자파)을 이용한다. 전자와 빛을 이동시켜서, 디지털 정보 1과 0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정보의 순환 속도 역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필요한 에너지 또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매년 IT사용자의 수 그리고 정보망에의 접근횟수가 각각 10%, 40% 정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정보 네트워크 관련 에너지 소모량은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2%정도이다. IT산업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매우 그린적인 산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높은 정보 순환속도의 증가는 2020까지 네트워크에 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1TW로 예측하고, 2050년까지는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사용해도 모자라게 만든다.

3. 탄소 사이클

물질 사이클 중, 생물의 기본 생존에 필요한 사이클이 탄소물질 사이클이다. 지구에서 사는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탄수화물(설탕)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CO₂를 배출한다. 식물은 동물이 배출한 CO₂에다가 물과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탄수화물을 합성해 낸다. 탄수화물은 에너지가 높고, CO₂는 에너지가 작다. 큰 틀에서 보면, 동물은 에너지가 높은 탄수화물을 낮은 CO₂상태로 만들고, 식물은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높은 에너지인

탄수화물을 만든다. 이러한 사이클을 동물, 식물 사이클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수 억년 동안 지구의 탄소 사이클은 동물, 식물, 그리고 지구자체가 마그마에서 내뿜은 탄소 사이클과 함께 완만한 정상 상태를 유지해 왔고, 생명이 진화해 왔다.

300년 전부터 시작한 산업화에 의해서 탄소 사이클에 인간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약 7억 톤의 CO2를 배출한다. 또한, 정보, 물질 사이클을 위해서 매년 약 100억톤 배출한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량 보다 12배 더 많은 CO2를 배출함을 알 수 있다. 인간은 건물을 유지하고 교통을 위해서 60% 이상의 CO2를 배출한다.

인간의 물질 사이클, 그리고 정보 사이클의 지수함수적인 증가는 에너지 공급을 필요로 하고,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대기 내에 CO2의 증가를 남기게 된다. 문제는 CO2를 대기에서 없애는 메카니즘인 식물사이클이 감당하기 힘든데 문제가 있다. CO2가 많으면, 지구는 뜨거워 지고, 작은 지구는 서늘하게 된다. 이 온도의 섭동이 자연계 전체를 변화시켜 '비 지속가능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4. 대안

2010년 현재 인류는 연 15테라와트 에너지를 소비하고, 부산물로 100억톤 CO2를 배출한다. 이 대가로 매년 60조 달러 정도 경제를 이룩하고 있다. 따라서 CO2 1톤당 6000달러 정도를 지구에 빚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를 희생하지 않고, 지속 가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 있다.

1) '물질, 정보 사이클 속도를 줄일 수 없다' 는 관점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 정보 사이클 속도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관점이다. 경제 성장 없이는 회사도 지속할 수 없고 정부(정치)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물 사이클을 증가시키고, CO2 배출이 없는 에너지를 개발하거나, 물질 정보 사이클 당 필요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저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식물 사이클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나무를 많이 심거나 베지 않는 방법, 광합성에 관련하는 생화학 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수정하여 광합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바이오 기술이 포함된다.

그리고 CO2 배출이 없는 에너지(그린 에너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CO2배출이 작은 에너지원인 태양열, 원자력, 그리고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같은 물질 사이클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작게 하는 기술의 개발과 물질의 재활용 기술 개발이 포함된다. 탄소 배출권제도 도입 역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서, 식물 사이클을 증가시키고,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하자는 것이 탄소 배출권 제도의 배경이다.

물질 사이클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량이나, CO2 배출량이 작은 정보 사이클 역시 저 에너지 소비형 새로운 반도체 기술, 통신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2) '물질, 정보 사이클 속도를 줄이자' 는 관점

단기적으로 보면 물질, 정보 사이클 속도를 줄이는 노력은 실패하는 듯이 보인다. 인간의 속성이 물질, 정보 사용을 줄일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이 관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제 논리의 수정, 인간의 생활 태도의 수정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안전을 보장하고 안락함을 보장하고 지위를 나타내는 큰 차를 버리고 작은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 발전 이외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작은 차를 위한 주차 공간, 보험 시스템, 그리고 작은 차 프레스티지(사회적 지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표에 에너지 CO2 배출량을 표시하는 것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같은 에너지라도 CO2 배출을 수반하는 에너지에 높은 등급을 매겨, 높은 등급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로 만들면 좋다. 명품 사용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일일 것이다.

5. 맺음말

한국은 1년에 GDP 1조 달러 경제를 위해서 약 7억톤을 배출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0.7%, GDP의 1.6%를 차지하면서, 7%의 CO2 배출에 기여하고 있다. 즉 1인 당, 세계 평균 2배를 더 벌면서 CO2는 10배 더 배출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한국은 생산기여도에 비해서 CO2를 더욱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다. 톤당 10달러로 환산하면 평균배출에 비해서, 600억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반도체 1년 파는 돈과 맛 먹는다.

한국은 교토 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 배출 규제에서 빠졌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작은 규제를 받아왔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기업, CO2 배출 관련 법, 제도, 그리고

경제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인식 모두 후진이다.

인류의 지속발전에 대한 위기와 근대 역사의 자본축적과정에서 서로 관계가 있다. 물질과 정보를 과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 경제 군사 주도권을 행사한 제국주의의 역사가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 역사에 자유로우면서도 한국은 경제적, 기술적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또한 북한과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속가능이라는 범인류적인 숙제 해결에 한국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대학,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새로운 경제, 과학기술, 그리고 정신혁명의 새로운 틀이 필요한 시점이다.



2회의 쟁점과 실천

- 발표 1 생태민주주의와 반핵운동
구도완(환경사회연구소 소장)
- 발표 2 한반도경제: 조직원리 · 구성요소 · 프로젝트
이일영(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 발표 3 1980년대 독일 녹색당의 평화 구상과 통일 정책
이동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생태민주주의와 반핵운동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1. 머리말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핵이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지구적인 위협임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사고 직후 독일에서는 수십만의 시위대가 원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겼을까? 위험은 실재적이고 객관적인 위해와 달리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핵 위험에 대해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를 둘러싸고 어떤 집합 행동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핵발전 정책도 달라진다. 환경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그것이 사회문제로 구성되지 않으면 환경정책이 발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다.

이 글은 반핵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나라에서 핵 위험을 둘러싸고 어떤 사회적 갈등과 협동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한다. 여기에서 주된 관심은 반핵운동과 핵발전 정책을 생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생태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생태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를 시도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 반핵운동의 역사를 생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표이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탈핵 사회로 가기 위한 생태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2. 핵 위협의 구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나온 방사성물질은 지금도 지구 생태계 안에서 방사능을 유출하고 있다. 인류와 자연의 균형을 위협하는 핵발전과 핵무기는 어떤 구조 속에서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는가? 첫째, 핵발전과 핵무기는 국가주의, 민족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핵발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핵발전은 핵무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술체계이다. 원전은 핵무기의 변형으로 개발되었고, 사용후 핵연료는 핵무기의 연료로 전환된다. 이 때문에 폭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핵발전에 대한 집착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핵의 군사적 이용’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핵 위협 구조의 바탕에는 외부의 (가상의) 적을 대상으로 폭력(군사력)을 정당화하는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있다. 둘째, 핵발전은 산업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값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목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재생산되었다. 공장 굴뚝의 검은 연기가 민족 웅비의 상징이었듯이 원전은 근대 발전의 상징이 되었다. 셋째, 핵발전은 과학기술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과학기술에 의해 핵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가 핵발전의 문화적 토대이다. 요약하면 핵발전은 국가(민족)주의, 산업주의, 과학기술주의를 바탕으로 확산되어왔다.

핵발전의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은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개발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지배세력들은 강력한 국가(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낙관론을 확산시키면서 산업 발전을 추동했다. 국가(민족)의 경제개발을 위해 핵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현대의 물질적 토대로 인식되었다. 원전 사고의 위험은 1980년대 이전에는 무시되었고, 쓰리마일과 체르노빌 이후에는 전체를 위해 소수가 감내해야 할 필요악으로 규정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원전 부지 확보, 건설, 폐기물 처분 등 전과정을 관리하고 있다.¹⁾ 이렇게 볼 때 핵발전은 개발국가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의 개발국가들은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계급갈등을 억압하고 노동자, 농민, 시민 등의 정치참여를 배제하는 지배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개발국가의 권위주의적인 지배체제 아래에서 핵 위협에 대한 정보는 소통되지 못했고, 반핵운동은 억압되었다.

1) 일본의 경우 민간전력회사가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와 전력회사가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정부가 원자력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부가 핵연료 주기 완성을 추진하면서 폐기물 처분을 담당하고 있다.

3. 핵과 민주주의, 그리고 생태 민주주의

1) 민주주의와 개발주의

핵과 민주주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핵 위협은 줄어드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들’의 차이를 드러내고 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현대의 정치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언제나 정치적 담론 투쟁의 한 가운데 놓인 채, 그 소리는 쓰는 이에 따라 다른 의미와 접합된다. 민주주의는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변형되면서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어간다.

민주주의의 수많은 모델들 가운데 어떤 민주주의가 탈핵 사회와 친화적인 체제일까? 이를 위해 우리는 권위주의/민주주의 구분과 함께 개발주의/생태주의 구분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류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 개발주의 패러다임과 구분되는, 미래세대와 비인간 존재의 권리와 이들의 참여를 고려하는 체제/담론이 현실적으로 출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도 정당성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생태주의를 둘러싼 지배체제/담론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 민주주의, 생태주의 기준으로 본 네 가지 지배체제/담론

| | 권위주의 | 민주주의 |
|------|-------------|---------|
| 개발주의 | 개발 독재(권위주의) | 개발 민주주의 |
| 생태주의 | 생태 독재(권위주의) | 생태 민주주의 |

개발 독재(권위주의)는 개발주의 이념을 동원하여 독재(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지배체제와 담론이다. 이 체제는 핵발전과 핵무기를 정당화하고 반핵운동을 억압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태 독재(권위주의)는 생태위기의 긴박성을 근거로 생태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권위주의적인 지배를 정당화하는 체제와 담론을 말한다. 생태위기가 긴박할수록 혹은 긴박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될수록 생태 권위주의의 가능성은 커진다. 생태 권위주의는 핵발전에 대해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가이아 가설의 창시자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은 기후변화의 긴박성을 근거로 원전의 위험성을 폄하하고 원전의 확대를 강력히 주장한다(러브록, 2008).

앞에서 보았듯이 권위주의 체제/담론은 핵발전과 친화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체(polity)는 열리고 지배 세력은 시민사회와 다양한 형태의 연대와

소통을 실천한다. 그러나 같은 민주주의 체제/담론 안에서도 개발 민주주의와 생태민주주의의 차이는 크다. 개발 민주주의는 개발국가의 권위주의적 특성을 민주화를 통해 참여적인 특성으로 전환한 체제와 담론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민족)주의, 산업주의, 과학기술주의 등 개발주의의 특성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현세대 국민'의 풍요가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을 통해 가능하고 필수적이라는 담론이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생태민주주의는 국가(민족)주의, 산업주의, 과학기술주의를 비판하면서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권리와 지속가능성을 현세대의 그것들과 함께 숙의하는 체제/담론이다. 개발 민주주의자들은 개발을 지향하기 때문에 핵발전의 위험보다는 개발 편익을 더 우선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생태민주주의자들은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권리와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를 강조하므로 이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관심을 집중한다.

2) 생태 민주주의

생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생태 민주주의의 의미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환경권, 즉 현세대 중심의 환경정의에 관심을 집중하는 논자들도 있고 풀뿌리 생태적 대안운동의 흐름을 넓은 의미의 생태 민주주의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숙의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생태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생태 민주주의론을 살펴본다.²⁾

존 드라이젝을 비롯한 많은 생태 민주주의 혹은 녹색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숙의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생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드라이젝은 숙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interest)와 의견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숙의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정치제도보다 비인간(nonhuman)의 이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Dryzek, 2000: 140). 숙의 민주주의자들은 숙의의 결과는 생태적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절차와 결과 간의, 다시 말해 민주주의와 생태주의 간의 긴장을 해결하고자 한다(구도완, 2011)

숙의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한 생태 민주주의는 누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드라이젝(Dryzek, 2000: 148)은 비인간에게 인간과 같은 자의식(self-awareness)이나 주체성(subjectivity)은 없지만 행위성(agency)은 존재한다고 말한다. 자연의 행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2) 숙의적 생태 민주주의론 이외의 다른 흐름도 있다. 울리히 벡의 생태 민주주의론은 숙의 민주주의론과 친화성이 있지만 하위정치를 강조하면서 사회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의 생태적 전환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생태 민주주의 개념은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혁명적 전환의 유토피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Beck, 1995: 180-82; Achterberg, 2001: 110-14). 다른 한편, 로이 모리스는 산업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사회기적으로 생태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생태 민주주의는 생태적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 문명이 야기한 도전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생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다"(Morrison, 1995: 23). 한국의 생태 민주주의 논의는 환경운동과 환경정책 사례를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민주주의를 재정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세한 논의는 각주 3)을 참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신호를 통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연과의 의사소통은 의사(pseudo) 합리적인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드라이젝은 정치적으로 타자화 또는 소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려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연과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을 비판한다.

숙의적 생태 민주주의론자들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생태적 합리성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논증하는 데 관심을 집중한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 눈 앞의 이기적 이해관심을 매개로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현실 정치 속에서 숙의적 생태 민주주의의 이상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상탈 무폐는 그것이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현실 정치는 '이상적 대화상황'과 달리, 상탈 무폐가 이야기 하듯이 '권력과 적대'에 의해 움직인다(Mouffe, 1999: 752). 이러한 적대는 '신들의 싸움'처럼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소할 수 없는 가치들간의 적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신들의 싸움'에서는 숙의는 없고 폭력과 적대가 있을 뿐이다. 실제 정치에서 파워 엘리트는 자신들의 헤게모니가 위협에 처했을 때에만 자신들의 지배권을 제한할 뿐이다. 국가의 핵심 의제에 대한 '이상적 대화상황에서의 숙의'는 정치사회적 자원들이 정치적 경쟁자들에 의해 평등하게 공유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³⁾

이러한 비판들은 현실 속에서 타당하지만, 숙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규범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숙의 민주주의론은 폭력이나 독단적 이성에 의존하지 않고 숙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정당성은 선택된 행동 방침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이유에 기초할 것을 요구한다 (헬드, 2010: 466). 시민들이 실제 숙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숙의적 생태 민주주의론은 숙의와 참여 과정에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 생태적 가치나 권리가 보호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해답을 주기 어렵다. 숙의 과정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숙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권리 보호의 문제에 대한 평가와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개인 자율성이나 재산권의 절대화 원칙에 매몰되지 않는 길이다.

3) 홍성태는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을 분석하면서 참여정부의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생태민주주의가 시대적 과제라고 말한다. 그는 민주주의의 내용을 개발 민주주의와 생태 민주주의로 구분하고 형식을 대의와 참여로 구분한 후 '부안 항쟁'과 이후의 주민투표를 "참여민주주의 방식으로 생태 민주주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분석은 생태 민주주의론을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운동과 참여의 정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홍성태, 2006: 152-55). 정규호는 "생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가치와 생태라는 실체적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의사결정구조와 권력의 배분을 통해 국가의 구조와 성격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말한다 (정규호, 2010: 451).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는 방폐장 문제, 새만금 개발과 미래세대 소송, 전성산 터널과 자연의 권리 소송 등을 분석한다. 그의 분석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핵발전 문제,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권리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윤순진(2007)은 생태 민주주의를 생태정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절차적으로 숙의 과정을 핵심적인 기제로 하는 사회정치원리로 규정하고 이런 관점에서 방폐장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외양에도 불구하고 생태 민주주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생태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약자는 물론 미래세대와 비인간 존재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들 혹은 대리인들의 정책과정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 안과 밖의 정치’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첫째로, 생태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숙의와 참여과정이 제도 안과 밖에서 즉 국가와 시민사회를 넘나들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권리의 범위가 사회경제적 약자는 물론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권리의 범위 확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기후변화나 핵 위험과 같은 지구적인 위험이 생태계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는 과학적, 사회적 지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비인간존재에 대한 인류의 공감능력이 커졌다. 보호해야 할 의무의 대상일뿐만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비인간존재를 인식하는 생태 윤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약자, 미래세대, 비인간존재의 권리가 보장되는가 하는 문제와 이들 혹은 이들의 대리인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두가지 이슈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첫번째 이슈는 생태적 결과, 즉 실질적 생태적 가치의 실현과 관련된 쟁점이고 둘째 이슈는 민주적 절차와 관련된 쟁점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

- 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가?
- ② 미래세대의 권리가 보호되는가?
- ③ 비인간존재의 권리가 보호되는가?
- ④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가?
- ⑤ 미래세대 혹은 미래세대의 대리인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가?
- ⑥ 비인간존재의 대리인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가?

만약 어떤 사례를 분석할 때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례는 생태민주적 의사결정이 절차적,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례에 관하여 ①과 ④의 쟁점에만 긍정적 평가가 내려진다면 그 사례는 현세대 내에서의 실질적, 절차적 환경정의만이 실현된 생태민주주의의 부분적 성공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어떤 사례의 경우, ②와 ⑤의 쟁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다면 인류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미래세대에 까지 실질적, 절차적 생태 정의가 실현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강댐 반대운동과 건설계획 백지화 사례는 위의 6개 쟁점과 관련하여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구도완, 2011). 이러한 분석 관점을 바탕으로 반핵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4. 반핵운동

1) 반핵운동의 시작(1988-1989)

반핵운동은 전문적인 환경운동 혹은 반핵운동조직이 중심이 된 운동과 지역주민들의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 박재묵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반핵운동조직은 1988년에 설립된 평화연구소이다. 이후 1990년에는 반핵정보자료실이 만들어졌다(박재묵, 1995: 52).

지역 반핵운동은 1985년 영광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88년에는 영광원전 3, 4호기 건설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1988년에는 고리 원전 부근에서 불법적으로 몰래 매립한 방사성 폐기물이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은 1988년에 월성과 고리 원전 주변 주민들과 연대하여 ‘동시다발 시위’와 ‘상경연대투쟁’도 벌였다. 이런 운동을 바탕으로 1989년에는 핵발전소 11, 12호기 건설 저지와 핵폐기물처분장 건설저지를 위해 전국핵발전소추방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박재묵, 1995: 56-61).

이 시기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치적 억압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잠재적인 불만이 폭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저항이 조직되기 시작하던 때였다. 핵 위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원전 주변 야산에 방사성 폐기물을 몰래 묻어버리던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사회경제적 약자, 미래세대, 비인간존재의 권리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책 참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방폐장 반대운동의 성공과 원전 반대운동의 실패(1990-2004)

• 방폐장 반대운동

1990년 이후 반핵운동은 급격히 발전했다. 그것은 일방적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집합행동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그리고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 등이 일어났다. 이 사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추진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행동을 조직했다는 점이다. 집회, 시위, 방화, 농성, 자녀 학교 안보내기 등 격렬한 직접행동이 이루어졌다.

부안 사례는 지역의 주민들, 농민조직, 시민사회조직, 종교인 등이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의 환경운동조직, 시민운동조직 등이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방폐장 부지

선정을 백지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윤순진, 2006). 이 운동 이후 원전을 넘어서기 위한 시민 태양광발전소,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등의 운동이 벌어진 것도 다른 사례와 다른 점이다.

• 원전반대운동

이 시기 방폐장 반대운동은 성공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저지하는 것은 실패했다. 1998년 울주군수는 신고리 원전건설 유치를 추진했고 이에 대해 울산시의 많은 시민사회조직들이 반대운동을 조직했으나 실패했다. 정부와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원전부지를 마련하지는 못했으나 신고리, 신울진 등 기존 원전부지 주변 지역에 신규 원전부지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원전 주변에 사는 원전 유치 찬성 주민들과 지자체장들 그리고 원전추진세력들은 기존의 위협에 추가되는 위협의 부담보다는 이로 인한 경제적 보상을 주된 이슈로 삼아 원전 유치를 추진하는 데 성공했다.

• 핵정책전환운동

1990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시기에 원자력 확대정책을 변경하는 정책전환운동도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 시대에 환경운동조직들은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을 지렛대로 삼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핵발전 정책에 대한 공론장을 구성하려고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시기 방폐장이나 원전 주변 주민들과 환경, 시민운동조직들의 운동은 활발했으나 전국적인 반핵운동은 발전하지 못했다.

• 에너지전환운동

2000년대 이후 반핵운동은 에너지 대안운동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로 인식되고 석유정점을 비롯한 에너지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기존의 반핵운동과 달리 반핵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핵발전의 대안으로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에너지대안운동 조직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 전환(‘에너지대안센터’로 창립하여 2006년에 단체명 변경)이라는 단체는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고 대안적인 에너지 정책을 시민사회 주도로 만들어가기 위해 2000년에 창립되었다. 이외에도 에너지 기후연구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소들이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산과 원자력 발전 반대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연구를 조직하고 담론을 활성화하며, 직접 행동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민운동 중심의 에너지 대안운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풀뿌리 운동도 2000년대 이후 발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부안 시민발전소와 등용 에너지자립 마을이다. 부안시민발전소는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에 참여한 지역의 지도자들이 종자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직접

출자하여 만든 시민주도의 태양광발전소이다. 2005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등용마을, 부안읍 원불교 부안교당, 부안 성당에 햇빛발전소 1, 2, 3호기가 설립되었다.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문규현 신부, 이현민 등은 원자력에 대한 대안을 마을에서부터 찾기 위해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드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등용마을은 약 30가구 50명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다. 이 마을은 2015년까지 마을 에너지 사용량을 30% 이상 줄이고, 총 사용 에너지의 50% 이상을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 태양열 온수기와 난방, 지역 냉난방 시스템, 바이오펠릿(나무 펠릿) 보일러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안 주민들은 ‘원자력-핵폐기장’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태양광, 풍력’을 선택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주겠다고 약속한 3,000억 원의 지역발전 지원금 대신 ‘산, 들,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고향’을 선택하였습니다.” (이현민, 2011: 5)

부안 시민발전소와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는 지역 반핵운동이 입지 반대투쟁에 머물지 않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요구 운동으로 발전하고, 그것의 변형으로 공동체의 자립적인 에너지 대안 운동으로 진화한 중요한 사례이다. 아직은 사회변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정도는 아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다른 지역을 이끄는 촉매제로서 의미를 지닌다.

요약하면 1990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시기의 특징을 방폐장 반대운동의 성공, 원전 반대운동과 핵정책 전환운동의 실패, 에너지 전환운동의 발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시기 반핵운동은 핵의 위협을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강력한 원전추진세력의 정치, 경제, 문화적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 시기 인간들과 비인간존재의 권리는 얼마나 어떻게 보호되었을까? 사례별로 차이가 크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 미래세대, 비인간 존재의 권리는 방폐장 반대운동이 성공한 사례의 경우, 부분적으로 보호되었지만, 원전 부지 주변 주민들 그리고 한국인들 전체의 경우 보호되지 않았다. 핵위험은 누적적으로 커져왔다. 참여 과정을 보면 방폐장 사례의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참여는 제도적 절차가 아니라 제도 밖의 직접행동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분노의 폭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부지선정을 철회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대리인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때 이시기 생태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직접행동과 시민들의 에너지전환운동을 통해 부분적으로 발전했지만 정책의 결과, 절차 두 측면에서 생태 민주주의는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반핵운동의 쇠퇴: 위험과 화폐의 교환 (2005-2007)

2005년 이후 원전과 방폐장은 기피 혐오시설에서 유치 경쟁 시설로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결정적 계기는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결정이었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2005년 파격적인 지원금 제시와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여 경주로 입지가 확정된 후 현재까지 건설 중에 있다. 2004년 부안 유치 신청 시에는 중·저준위 방폐장과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을 함께 입지시킬 예정이면서 지역발전기금 3,000억 원과 양성자 가속기 발전 사업을 제시했던 데 비해 2005년 경주로 선정되었을 당시에는 입지 시설물이 중·저준위 방폐장으로 축소되었으면서도 부안 때 제시했던 경제적 유인 외에 한수원 본사 이전, 방폐물 반입 수수료 등 더 많은 지원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문화하여 법적으로 지원 내용을 보장하였다.

2005년 이후 한국의 원자력 정책은 위험을 화폐와 교환하는 거래 게임으로 전환되었다. 방폐장이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의 대상이 아니라 핼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의 대상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고준위 중간저장시설과 중·저준위 방폐장을 분리하여 위험은 낮추고 보상은 높이면서 주민참여라는 민주적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찬성률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다는 게임의 규칙을 정해서, 위험 프레임을 경쟁 프레임, 즉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간 경쟁 프레임으로 대체했다. 위험을 짊어져야 할 현세대 주민, 수만 년에 이르는 미래의 세대, 다른 생물종들의 안전에 대한 이해관심은 현세대의 경제적 이해관심에 의해 지배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핵발전의 미래, 사용후 핵연료와 고준위 핵 폐기물의 처리 등 핵심적인 핵 위험에 대한 열린 공론은 배제한 채, 경매 형식의 주민투표로 위험을 배분했다.

생태 민주주의 관점에서 이 시기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위험이 줄어들지는 않은 채 이들의 위험이 화폐와 교환거래되었다.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이들의 대리인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 같은 ‘정치적 이미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안전과 권리에 대한 상위정책에 대한 공론장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4) ‘원자력 르네상스’ (2008-2010)

노무현 정부의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과 건설로 인해 반핵운동은 크게 쇠퇴하고 핵발전 확대정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원전 확대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국가의 ‘신발전 패러다임’으로 천명했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연방에 원전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원전 수출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반핵운동은 크게 후퇴하여 정책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원전 확대와 수출 정책으로 인해 핵 위험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 확장되고 사회경제적 약자, 미래세대, 자연의 위험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시기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숙의적, 참여적 정책 과정은 크게 후퇴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국가에너지위원회에 참여했던 비판적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 전국적인 시민 참여의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되었던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위원회로 내려갔다. 실제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해체되고 대신 녹색성장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핵발전 문제를 둘러싼 위험 증대와 권리 보호 문제를 정책과정에서 제기하고 숙의할 수 있는 틀이 사라졌다.

5) 반핵운동의 부흥과 전환 (2011-현재)

후쿠시마 사고는 한국 반핵운동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사고 직후 대부분의 매체가 사고의 진행상황과 핵 위험을 자세히 보도했다. 사고후 4월 27일에 이루어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서 집권 한나라당 후보 엄기영은 처음에는 강원도내 신규원전 건설에 대해 찬성했으나 원전사고 이후 유보입장으로 바꾸었다. 반면 야당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문순은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 선거에서 원전 문제가 주된 이슈는 아니었지만, 최문순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했다. 다른 한편, 환경운동조직들과 부산 지역 시민사회운동조직들은 수명이 연장된 고리1호기 반대운동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반핵운동이 지역 정치 의제에서 전국적인 의제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운동의 참여자도 지역 주민이나 환경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문가 집단과 시민 그룹으로 확대되었다. 탈핵 교수모임, 탈핵 법률가 모임, 탈핵 의사 모임 등이 구성되었고 한 살림, 두레 생협 등 생협조직도 탈핵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둘째, ‘반핵’이라는 말대신 ‘탈핵’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핵발전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핵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세우고 이를 위한 생활양식 전환을 조직하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셋째, 지자체장들의 탈핵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012년 2월에는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자체장 모임'이 구성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 초, 강력한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통해 원전을 줄이는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넷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원자력확대정책의 전면 재검토 혹은 원전 추가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집권 새누리당은 원자력 확대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다섯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탈핵을 주된 목표로 삼은 녹색당이 창당되었다. 1991년 3월 낙동강 폐놀 오염사고가 환경운동의 확산을 촉발한 것처럼,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녹색당 운동을 촉발했다.

이 시기 사회경제적 약자, 미래세대, 비인간존재의 권리나 참여과정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탈핵을 위한 토론과 행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중앙정부가 닫힌 정체(polity)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동안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핵위험을 줄이는 정책 과정을 아래로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생태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와 지역 수준에서 활발히 되살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논의

1) 생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반핵운동

지금까지 반핵운동의 역사적 과정과 그 결과를 생태 민주주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생태 민주주의의 여섯 개 기준을 가지고 질적으로 평가하면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생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시기별 핵발전 관련 권리와 참여과정

| 연도 | 1987-1989 | 1990-2004 | 2005-2007 | 2008-2010 |
|----------|-----------|-----------|-----------|-----------|
| 특성 | 시작 | 고양 | 쇠퇴 | 암흑 |
| 약자 권리 | 보호 안됨 | 부분 보호 | 부분 보호 | 위험 증대 |
| 미래세대 권리 | 보호 안됨 | 부분 보호 | 보호 안됨 | 위험 증대 |
| 비인간존재 권리 | 보호 안됨 | 부분 보호 | 보호 안됨 | 위험 증대 |
| 약자 참여 | 배제 | 부분 참여 | 의사 참여 | 배제 |
| 미래세대 참여 | 배제 | 배제 | 배제 | 배제 |
| 비인간존재 참여 | 배제 | 배제 | 배제 | 배제 |

1987년에서 89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지역의 반핵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약자, 미래세대, 비인간존재의 권리는 거의 보호되지 않았고 이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1990년 안면도 방폐장 반대운동 이후 2004년에 이르는 긴 과정 속에서 방폐장 반대운동의 성공으로 인해 적어도 방폐장 예정 부지 주변 주민의 권리와 그 지역의 미래세대, 비인간존재의 권리는 부분적으로 보호되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인해 공식적인 정책과정은 아니지만 직접 행동을 통한 정책 참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래세대나 비인간존재의 대리인이 참여하는 공론장이나 정책과정은 적어도 국가 부문에서는 발전되지 않았다.⁴⁾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은 반핵을 넘어서 에너지 대안에 대한 정책 토론과 시민태양광 발전소, 에너지 자립 마을 등 대안 만들기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가의 정책과정은 여전히 개발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풀뿌리 시민사회에서는 생태 민주적 전환의 주체들이 형성되고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다.

2005년 이후 생태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은 경주 방폐장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이 비록 '내 지역은 안된다'라는 프레임을 넘어섰지만 실제로는 경주 방폐장이라는 정책 결과를 낳았다. 국가의 핵발전정책의 전환 없는 방폐장 반대운동은 화폐-위험 거래 프레임으로 전환되어 경주 방폐장으로 귀결되었다.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의 성공으로 부안 주변 지역의 안전은 보호되었지만 경주 주민들, 미래세대, 자연이 부담해야 할 핵 위험은 커졌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는 화폐로 거래되면서 보호되는 것 같은 가상을 갖게 되었다. 경매 형식의 주민투표 제도 도입으로 주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같은 자유 민주주의의 참여 형식 속에서 미래세대와 비인간존재의 정책 참여는 의제에 오를 수 없었다. 이것이 인류 중심의 개발 민주주의의 한계이자 특성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핵발전 확대정책으로 인해 핵위험은 지구적으로 증대되고 약자, 미래세대, 비인간존재의 권리는 억압되고 정책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극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약자, 미래세대, 비인간존재의 권리에 대한 토론과 직접행동이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거버넌스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핵사고로 인한 위험 인식과 소통 증대로 인해 새로운 생태 민주주의의 흐름이 생기고 있다.

4) 2004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에서 추진한 전력정책에 관한 합의회의는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진 생태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속의과정이 제도적 전환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윤순진, 2005).

2) 핵위협과 민주주의

반핵운동과 핵발전정책은 생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반핵운동, 특히 방폐장 반대운동은 ‘고향을 지키다’는 프레임을 중심으로 미래세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협 배분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생태계나 생물종의 위협에 대한 인식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부안 방폐장운동과 새만금 반대운동의 연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역 반핵운동은 생태민주주의의 세 측면(시간/공간/절차)의 전환을 추구했으나 단기적으로(2004년까지) 지역의 방폐장 입지 저지에는 성공했으나 생태민주주의의 세 측면의 구조 변화를 이끄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의 경우, 시민발전소와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발전하여 마을과 지역 수준의 자립적인 생태적 대안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방폐장 반대운동의 사례는 현세대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은 이런 좁고 단기적인 운동으로부터 폭넓고 장기적인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런 측면에서 부안 방폐장 반대운동은 지역 반핵운동이 생태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2005년 이후 원자력 패러다임은 반대 운동 패러다임에서 유치경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주민투표라는 민주적 절차의 도입이 내용적 생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기보다 주민참여라는 형식적 절차의 정당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주민투표가 숙의성을 강화하지 못하고 지역간 경쟁을 부추기는 맥락 속에 기획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위험과 화폐를 맞바꾸는 적극적 위험 감수의 정치학이 낙후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사회경제적인 지역 간 불평등이 생태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과 같은 의사(pseudo) 참여 절차와 경제적 보상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 보장의 형식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 비인간존재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험을 높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에너지 대안 운동이 발전하고 있다. 이 운동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생태적 위협에 대한 정의와 대응을 지배세력이 독점하는 데 반대하고 시민사회 주도의 생태민주주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핵발전의 위험을 지역 차원의 반대운동이 아니라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대안만들기를 통해 줄여나간다는 점에서 생태민주주의의 여섯 개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이 작은 운동단체나 커뮤니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책과정이나 정책결과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과 의미가 제한적이다.

우리는 정치체제의 폐쇄와 지배세력의 시민사회 배제가 핵 위험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화 → 반핵운동의 발전 → 방폐장 설치 실패’의 경로를 걸었으나 개발 민주주의 체제의 적극적인 방폐장 정책으로 인해 반핵운동이 급속히 약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이 반핵운동이 약화된 상황에서 개발 권위주의 정부가 등장하면서 ‘권위주의화 → 반핵운동 약화 → 원자력 확대’와 같은 후퇴가 일어났다.

민주화가 이루어져 핵 위험 정보가 활발히 소통되면서 반핵운동이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반핵운동은 방폐장 반대운동에만 일시적으로 성공했을뿐 정책전환을 이끌만큼 성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부 아래에서도 핵 위험은 줄어들지 않았고 반핵운동은 약화되었다. 개발 권위주의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정체가 폐쇄되고 이와 함께 반핵운동도 약화되어 핵 위험은 더욱 커졌다. 민주주의만으로는 핵 위험을 줄일 수 없고, 민주주의의 생태적 전환, 즉 생태민주주의가 발전해야만 핵 위험을 줄일 수 있다.

6. 맺음말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대의 위험이 피하기 힘든 지구적인 위험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대가 성공하면 할수록 전 지구적 위험은 확산되고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전 지구적 핵 위험은 평등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대응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운동 특히 반핵운동이 강한 사회에서 핵 위험에 대한 정의와 통제는 국가나 원자력 세력이 아니라 비판적 시민사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1990년대 이후 지역 반핵운동의 발전으로 핵 위험에 대한 정의와 대응은 부분적으로 시민사회에 의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부안 방폐장 반대 운동과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 에너지 대안운동, 전력정책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등과 같이 위험에 대한 생태민주적 정의와 대응이 새롭게 일어났다. 이러한 새로운 생태민주 정치의 숙의의 제도화와 대안적 에너지 정책과정을 통해 생태적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위험과 화폐의 거래 정책은 원자력 패러다임을 위험 프레임에서 개발 프레임으로 바꾸었고 숙의와 생태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후퇴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참여 기제를 폐쇄하고 원자력 확대정책을 추진하여 핵 위험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결정력을 강화시켰다. 결국 한국 사회는 ‘지역 반핵운동의 발전 → 에너지 대안운동 발전과 시민사회 공론장 활성화 → 생태민주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 탈핵정책’과 같은 생태민주적 진화 경로를 밟지 못하고, ‘개발권위주의적 거버넌스 → 핵발전 확대정책’과 같은 개발

권위주의화의 길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핵위험은 관리가능하고 통제가능한 위험으로 정의되고 기존의 핵발전 확대정책은 변함없이 지속된다.

생태민주주의는 인류중심적 민주주의를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정치사회적 과정이다. 독일과 같이 생태민주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탈핵으로 가는 사회적, 정치적 역량을 조직할 수 있다. 생태민주주의의 힘이 약한 일본과 한국, 중국의 시민들은 더 많은 핵 위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체념과 무력감의 사회심리학이 자라난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비극은 새로운 미래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핵 위험사회의 생태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단의 범위를 미래세대와 생태계로 넓히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참고문헌

구도완. 2011. "생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환경운동 사례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25호.

러브록, 제임스 (James Lovelock), 2008. 『가이아의 복수』. 세종서적

박재묵. 1995. "지역반핵운동과 주민참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윤순진. 2005. "공공참여적 에너지 거버넌스의 모색: 전력정책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 연구』, 제15권 제4호: 121-153.

_____. 2006.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ECO』, 제 10권 1호: 7-42.

_____. 2007. "생태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ECO』 11권 2호.

이현민. 2011. "핵폐기장을 뛰어넘어 '생태도시' 를 향하여-전북 부안 등용마을,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가는 주민들 이야기". <http://buanpower.tistory.com/entry/부안-등용리-에너지자립마을과-부안시민발전소-소개-한글자료>. 2011. 6. 검색

정규호. 2010. "생태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편. 『민주주의 강의 4: 현대적 흐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헬드, 데이비드, 박찬표 옮김. 2010. 『민주주의의 모델들』. 후마니타스.

홍성태. 2006. 『개발주의를 비판한다: 박정희 체계를 넘어 생태적 복지사회로』. 당대.

Achterberg, Wouter. 2001. Democracy, Justice and Risk Society: the Meaning and Shape of Ecological Democracy. John Barry and Marcel Wissenburg eds. Sustaining Liberal Democracy: Ecologic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algrave.

Beck, Ulrich, Amos Weisz trans. 1995. Ecological Politics in an age of Risks. Cambridge, Polity Press.

Dryzek, John, S.,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Morrison, Roy. 1995. Ecological Democracy. Boston: South End Press. 모리슨, 로이. 노상우, 오성근 옮김. 2005. 『생태 민주주의』. 교육과학사.

Mouffe, Chantal. 1999. Deliberative Democracy or Agonistic Pluralism. SocialResearch 66-3, pp.745-758.

한반도경제: 조직원리 · 구성요소 · 프로젝트

이일영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

1. 일국적 시야를 넘어서

최근 한국에서는 ‘경제민주화’ 나 ‘복지국가’ 가 주요한 경제개혁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논의는 주로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복지국가 논의는 신자유주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자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편에서는 재벌개혁을 앞세우는 경제민주화론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한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국가 논의가 재벌체제를 용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¹⁾

그러나 경제민주화론과 복지국가론 사이의 논쟁이 대안적 모델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 우선 경제민주화론은 현실에서 부딪치는 재벌개혁의 과제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고 명료한 형태로 대안 모델을 제시하는 데는 신중한 편이다. 복지국가론은 보다 분명하게 대안 모델을 제시하려 하고 있지만, 강렬한 문제의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실적 제약조건에 대한 인식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경제체제를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는 국가사회주의 모델, 복지국가 모델, 동아시아 경제모델 등이 존재했다. 이들 모두 인구 · 영토 · 주권의 담지자로 발전해온 국민국가가 주요하거나 일정하게 경제주체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의 복잡성이 증대하면서 국가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비중은 한계에 부딪쳤다. 경제의 복잡화는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무역 · 생산 · 금융의 글로벌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국가가 보유했던 무제한적 · 불가분적 · 배타적 형태의 공적 권력이라는

1) 『프레시안』의 Hot Issue 특별기획 ‘한국경제 성격논쟁’을 참조.

개념은 변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거시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던 국민국가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국가간 경쟁을 조절하던 세계체제 질서도 동요하고 있다.

경제의 복잡화 과정에서 국가사회주의는 가장 먼저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복지국가 모델도 신흥국에서 다시 반복·재현되기는 어려운 조건이 되었다. 국가차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을 다수 대중에게 재분배하는 모델은 국가 차원에서의 경제성장과 재정 확대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장기 침체와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때문에 신흥국에서는 더 이상 사회민주주의나 복지국가가 대안 모델이 되기 어려워졌다.²⁾

20세기 내내 국가 형성의 과제에 골몰해야 했던 한반도에서는 특히 국가를 주요 행위자로 설정하는 사고의 영향력이 강력했고 이것이 동아시아 모델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남북한 분단체제는 각각의 국내 지역을 국가에 강하게 결박시킨 국가간 체제였다. 남북한 당국은 근대 이후 국가간 체제들에 비해 더욱 강력한 정도로 모든 문명과 활동을 국내영역과 국외영역으로 조직하고 구분했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가격을 왜곡하는 거시정책과 통제적인 관리체제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북한에서는 국가와 기업이 일체화되었다. 남한의 경우 국가나 재벌이 주도하는 영역에서는 시장원리가 과소하게 적용되었다.

경제의 복잡화와 세계체제의 변동 과정은 동아시아 모델과 국가사회주의 모델을 하위체제로 하는 분단체제와 모순·갈등하고 있으며, 조직·제도·체제의 개혁과 이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행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역시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체제에서의 국가가 복지국가의 국가처럼 기능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2. 새로운 행동의 조직원리, 네트워크

1980년대 이후 왜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케인즈주의가 쇠퇴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했던 것은 국가에의 의존이 많은 폐해를 수반했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황포'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제 '시장인가, 국가인가'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분단체제가 '한반도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차원에서는 남북한 경제의 통합과정에서 효율화와 격차해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에서는 인센티브 개혁, 지배구조

개혁, 소유제 개혁이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하고, 남한에서는 격차 해소와 성장 한계 돌파를 위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경제 형성에 있어서 비용과 경로의존의 경향을 감안하여 남북한 사이에 경제적 거래비용을 줄이는 조직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시장의 과잉과 과소, 국가의 과소와 과잉이 착종되어 있고 사회 각 계층과 집단에서 자신들의 협소한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위험을 기피하고 단기주의적 시야에서 서로 타협하고 있다.³⁾ 이러한 '나쁜 균형' 상태는 일종의 견고하고 복잡한 구조인데 국가의 개입으로 이 구조를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 기계나 건축물을 고치듯 구조를 바꾸는 방식보다는 구성원의 관계와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와 행동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조직·제도의 형태이다. 네트워크는 하이브리드 조직의 일종이다. 네트워크는 에 대해서는 위계(기업 혹은 국가)와 시장 사이의 중간적 형태 혹은 혼합적 형태의 관계이다. 네트워크는 또한 커뮤니티의 특징을 지닌다. 커뮤니티는 국가나 시장과 달리 사람들이 공동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활용해왔던 동기를 효과적으로 조장하고 이용하는데, 커뮤니티의 특징은, 첫째, 관계의 반복성과 지속성, 둘째, 다른 구성원의 정보가 쉽게 획득되고 확산된다는 점, 셋째,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⁴⁾

이러한 개념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수준과 범위의 것을 포괄한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관계는 기업간 관계에서 존재한다. 지역 클러스터, 기업간 제휴와 장기적 거래에 기반한 협력관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소위 사회적 경제 부문도 네트워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거버넌스 수준에서 지역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도 포함한다. 국가 차원의 이해관계자의 협의 기구나 위원회 등도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도 참여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반복적,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의 행동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관계라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구성원들에 의한 자발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규범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협력 행동의 조직화가 일어날 수 있다.⁵⁾

시장조직은 일회적·수평적 관계이므로 인구·영토·권위를 보유할 이유가 없지만, 위계적 조직의 경우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확연하게 구분하여 내부에 인구·영토·권위를 가두어두고 수직적 관계를 수립한다. 특히 국가는 위계적 조직의 정점에 있는 조직형태이다. 네트워크의 경우 인구와 영토를 보유하지만 그 경계에는 유동성이 허용되고, 권위를 보유하지만 그 관계는 수평적·

3) 이일영 외 (2005). 한국형 신진보주의 경제 이념: 개방-혁신-연대의 한반도 경제, 『동향과 전망』, 64호.

4) Bowles, S. (2004). Ch. 14. Economic Governance: Markets, States, and Communities. In Bowles, Samuel (2004). Microeconomics: Behavior, institutions, and evolu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5) 김창욱 (2012). '사회적 넷'의 탈출구로서의 네트워크, 미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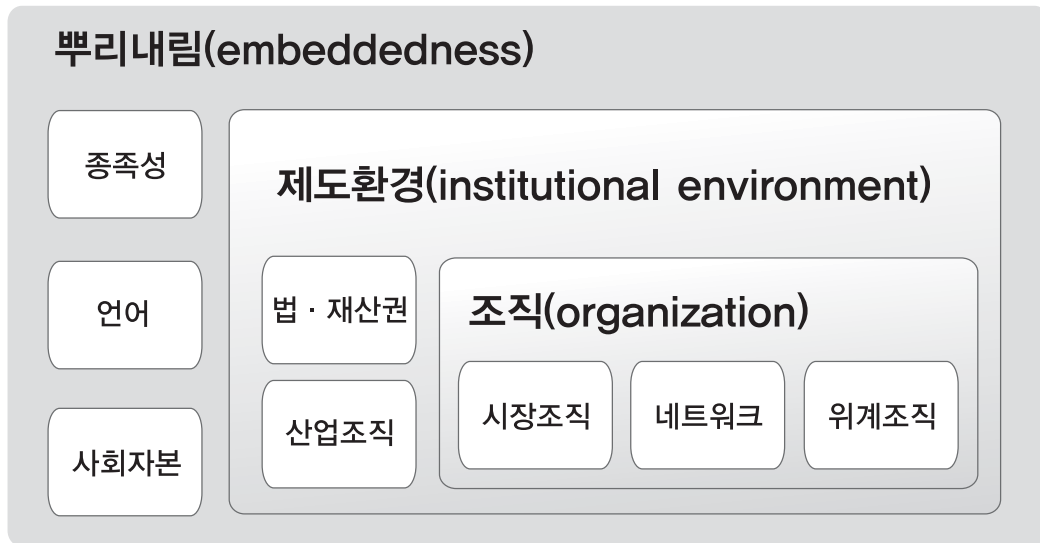
2) Wallerstein, Immanuel (2011). The Social-Democratic Illusion, Commentary No. 313, September 15, 2011, <http://www.iwallerstein.com/socialdemocratic-illusion/> (프레시안, 2011.9.16.)

자발적이다. 네트워크 역시 지속적·반복적 관계로 형성된 공간을 갖는데, 이를 지역(region)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역 내에는 네트워크 조직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경제학의 논의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지역을 구성하는 조직·제도 요소를 배열해보면 <그림 1>과 같다. 뿌리내림에는 종속성, 언어, 사회자본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제도환경으로는 헌법제도나 재산권, 산업조직 등 요소를 생각해볼 수 있다. 거버넌스 또는 조직(organization)에서는 시장조직과 위계조직이 전형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그 중간에 이들의 혼합형(hybrid)이 존재하는데, 네트워크는 혼합형 조직의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제도는 인구·영토·국가주권을 지배하고 그것이 종속성에 기초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도 환경으로 작동한다. 그렇지만 조직형태나 뿌리내림(embeddedness)이 국가라는 제도환경과 항상 영역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과 기업은 기존의 행동패턴을 반복하는 편이지만, 글로벌화와 함께 시장과 기업은 국가제도와 경쟁하는 새로운 제도환경을 창출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새로운 관계와 행동을 창출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주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지역을 구성하는 조직·제도



자료: 필자 작성

3. 새로운 경제체제의 구성요소

새로운 경제체제는 네트워크 조직형태의 발전에 기초하여 형성되는데, 이는 지역으로서의 한 반도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경제체제는 '한반도경제'이며 그 조직 원리는 네트워크이다. 즉 '한반도경제'는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남북한 내부를 개혁하고 네트워크 관계로 남북한과 세계가 연계되는 글로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⁶⁾

'한반도경제'는 지향과 과정을 의미하지만,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시 환경·과제·전략 등 구성요소로 구조화해볼 수 있다. 이 때 '한반도경제'는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에서의 삼중의 환경 변화 조건에 대응하는 체제로서, 평화질서·남북연계·혁신국가라는 삼중의 과제를 수행한다.

'한반도경제' 모델에서 삼중의 과제와 대응하는 네트워크는 국가·초국가 네트워크, 지중해경제 네트워크, 혁신적 네트워크 경제조직 등으로 구성된다. 국가·초국가 네트워크는 국가 내부와 국가 간에 존재하는 제도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존재하는 공유된 연결망이다. 지중해경제 네트워크는 한국·북한·중국·일본 등의 여러 도시들 사이에 존재하는 반복적·지속적인 연결망이다. 혁신적 네트워크 경제조직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지역간 생산력 격차에 대응하는 조직간·지역간 연결망이다(그림 2).

<그림 2> 한반도경제 모델의 구성요소



자료: 필자 작성

6) 이하 이일영 (2012). 2013년 이후의 '한반도경제': 네트워크 모델의 제안, 『창작과비평』155(2012 봄)에 주로 의거함.

1) 국가·초국가 네트워크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불안정,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으로 세계체제의 현실은 카오스와 질서의 중간 영역에서 존재하게 되었다(환경). 미국이 지배력을 행사하던 질서에서 카오스 상태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평화 질서의 형성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과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간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국가·초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 정치·군사 분야는 국가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금융 및 자원 부문, 그리고 개발협력의 의제에서는 정부간 네트워크는 물론 비정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도록 한다(전략).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국민국가를 넘어 다양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조건 속에서 국가 단위의 전략만이 꼭 유효한 것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발전주의모형을 따라왔다. 국가가 주요 행위자가 되어 개방과 경제발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결합시켜 온 경우로 평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조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면적인 경제공동체 형성을 시도하는 것이 카오스로의 경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한미 FTA나 한중 FTA는 국가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국가 행위자를 주요 노드(node)로 삼는 ‘노드 간의 정치(inter-nodal politics)’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거대 국가와의 FTA를 통해 국가간 분업이나 산업간 분업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⁷⁾

동아시아에서의 무역과 투자 확대는 이미 자율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논의할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시장의 위험이 높고 국가간 조정이 필요한 부문은 금융과 자원 분야이다.

향후에는 금융위기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 실물적 성장을 위해서는 발전된 금융시장이 필수적이지만 모든 증권화에는 편익과 함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국가간 협력을 통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자원위기의 가능성을 지닌 국가이다. 에너지와 식량과 같은 자원의 경우 소수의 메이저 공급자에 의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금융화에 의한 가격 변동이 심하다. 이들 자원시장에서 한중일은 비중 있는 수요자이며, 한중일이 협력하면 시장 위험을 줄이면서 시장구조를 변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초국가 네트워크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의 세계체제가 카오스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데에는 미국에 집중되었던 경제적 자원의 우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행위자 이외의 네트워크형 행위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초국적기업, 지구적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과 같이 태생적으로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는 비(非)국가 행위자들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⁸⁾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질서는 국가간 관계뿐만 다층의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치·군사 분야는 국가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금융·외환, 에너지·식량·자원 부문, 개발협력, 고용·빈곤, 사회통합, 환경 등 분야에서는 정부간 네트워크는 물론 비정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서의 정책적 수렴과 협력체계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한중일과 미국, 그리고 남북한 간 국가관계에 네트워크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방적 정책조정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의제별로 초국가기구, 회원국 정부, 국가 하부의 행위자들 사이에 수직·수평의 정책네트워크를 작동시킴으로써 중앙집중형 규제 메커니즘에서 분산형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2) 지중해 도시네트워크

분단체제는 상위의 세계체제의 변화, 남한의 민주화, 북한의 축적 위기 등으로 체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악화는 북중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전략 변경을 지연시킬 수 있다(환경). 분단체제의 평화적 해소를 위해 남북한 간에도 국가적 차원의 연합·통합 이전에 네트워크에 의한 연계를 누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과제). 한중일 간에 영토주의적 경향이 약한 도시들이 주체가 되어 동북아의 바다를 연결하는 ‘동북아 지중해경제’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네트워크에 북한의 도시들이 참여하도록 한다(전략).

분단체제의 해소에는 남북한 경제통합과 경제체제의 개선·개혁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체제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다. 북중관계의 강화는 물론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개선도 기존 지배체제 유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 통합이 맞물려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따라서

7) 한미 FTA는 물론 한중 FTA나 한일 FTA의 경우에도 통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카오스화하는 세계체제 속에서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미 체결된 FTA의 경우 부작용의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형상 중인 FTA의 경우 협상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도록 노력하면서 네트워크 관계를 강화하는 쪽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

8) 김상배 (2008).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48(4), 한국국제정치학회.

남북한 간의 국가적 차원의 연합·통합 이전에 네트워크에 의한 연계를 누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간 협조 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단체제의 카오스화를 막기 위해서는 도시를 단위로 한 국가간 네트워크 관계를 누적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동북아의 국가들은 영토와 인구에 대한 통제에 관심이 많고 국가형성과 전쟁능력에 치중하는 속성이 있다. 남북한간 갈등과 미중, 중일간 갈등도 영토주의적인 국가의 속성에 기인하여 구조화된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영토주의적 경향이 보다 약한 도시가 주체가 되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 즉 동북아의 바다를 연결하는 ‘동북아 지중해경제’를 상상하고 추진함으로써 해 보자는 것이다.

‘동북아 지중해경제’는 다양한 층위의 도시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천-개성-해주, 부산-광양-제주의 ‘소삼각’ 네트워크, 인천-칭다오-다롄, 부산-후쿠오카-오사카의 ‘중삼각’ 네트워크, 서울-베이징-도쿄의 ‘대삼각’ 네트워크를 구상해볼 수 있다. 도시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새로운 글로벌 지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만들어낸다. 무역이나 투자는 주로 시장적 거래 또는 기업의 경계 확장에 의해 주로 발전하지만, 이동과 비시장적·비기업적인 네트워크도 새로운 형태의 무역과 투자를 창출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다양한 미시적 조직관계의 창출이 새로운 제도와 산업기반을 만들고,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자본과 문화적 조건을 배양한다. 경제적·문화적 교류와 이동을 중심으로 활성화된 도시네트워크는 보다 제도적인 형식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도 있다. 이는 중심적 통치의 부재 속에서 그 자체에 고유한 목시적이고 명시적인 원칙·규범·절차를 가지는 “질서 있는 아나키”를 지향한다.

남북한 국가간 갈등을 뚫고 성장해온 개성지역은 평화질서와 남북연계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지역’과 도시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개성지역은 국가개입에 의한 발전방식과는 달리 기업·화폐·정보·자원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이동의 심화를 통한 발전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분단체제 하의 국가간 갈등에도 자생력을 유지하는 ‘글로벌 지역’이라 할 수 있다.⁹⁾

현재 개성지역은 글로벌화한 생산망과 유통망에 연계되어 있다. 1990년대 초 이래 대다수 국가가 해외투자 규제를 자유화하고 자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 바 있다. 대부분의 경우 1차 산품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감소하고 제조업의 투자는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공정을 초국적 차원으로 확장함에 따라 중간제품 거래가 증가하고, 신흥공업국 제조업 수출에서 다국적 기업이 중요해졌다.

9) 이일영 (2012). 개성은 ‘글로벌 지역’이다, 『경향신문』, 2012.5.30.

개성지역은 북한이 외부의 제조업 투자를 구하게 된 흐름과 남한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생산네트워크를 발전시켜가는 흐름과 만나는 지점에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개성지역 내부에서의 네트워크조직도 발전하고 있다. 이행기경제의 일반적 과제는 위계제 경제조직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개성 지역에 형성된 정치·경제 조직은 종래의 위계제적 조직에 비위계적 성격을 강화하는 네트워크화의 경향을 보이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물론 가장 뚜렷한 조직 형태는 여전히 위계제적 조직이지만, 그 위계성의 정도는 다양해지고 있다. 개성지역 입주기업들 사이의 관계, 입주기업과 노동력알선기업 간의 관계, 입주기업과 남북한 정부기구간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네트워크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개성이 해주와 연결되면, 개성-해주는 파주-강화를 잇는 남북경협벨트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칭다오-다롄, 그리고 상하이-텐진과 이어지는 지중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신의주 특구가 개발되면 신의주도 이 네트워크의 연결망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도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지역은 국가간 체제와 병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고 국가간 갈등을 완충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도시들은 각국의 경제·문화 능력의 집적지이면서 전쟁형성 능력과 영토주의 성향으로부터는 일정하게 분리된 존재이다. 따라서 도시네트워크는 국가간 협력체나 공동체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시민의 인권과 행복을 보다 중심적인 의제로 삼는 공화주의를 실천하기에도 더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네트워크가 작동하면 각국이 ‘시민국가’(civic state) 쪽으로 변화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3) 네트워크형 경제조직

한편 국내경제의 성장과 분배에서 병목이 되고 있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지역간 생산력 격차는 국가-재벌관계로 위계화된 발전주의 모델의 결과이자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환경).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위계적 시스템을 분권화하고 네트워크형 조직 요소를 증대함으로써 네트워크형 혁신국가로 이행해야 한다(과제). 이를 위하여 공정경쟁 시장조건을 만드는 재벌정책,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정책, 분권적 광역지역경제권을 형성하는 지역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전략).

현 단계에서 한국경제의 성장과 번영을 제약하는 것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수도권-지방간의 생산력 격차인데, 이는 기업간, 지역간에 형성된 위계적·수직적 관계로부터 나온다.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지식기반 경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와 재벌경제를 중핵으로 하는 경제시스템은

혁신의 성과를 내기 어려워졌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대기업에 힘이 집중된 위계적 시스템을 분권화하고 경제조직에 네트워크형 또는 혼합형 조직형태의 요소를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 즉 네트워크형 혁신국가로 이행해야 한다.

발전주의 모델 속에서 형성된 위계적 구조를 네트워크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정책, 중소기업정책, 지역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관된 공정거래정책이 필요하다. 재벌문제의 핵심은 부당 내부거래에 의한 기업경계의 부적절한 확대이다. 기업이 지나친 조직화 비용을 쓰지 않고 혁신을 통한 성장에 치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의 제정과 집행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절차를 투명화하는 전제 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국세청과 연계하는 등 권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재벌계 대기업의 하도급 거래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간·조직간 네트워크 관계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형 조직형태를 발전시켜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간에 공정한 거래와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혁신지향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적 설계능력과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인프라를 제공하고 수출 촉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과 연계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소기업들 사이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협동조합 결성, 공동브랜드·공동인프라 사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셋째, 지역정책이 중요하다. 분권적 광역지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위계적 발전국가와 재벌체제의 성공의 경험을 지역 차원에서 재현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기획으로 지역 클러스터를 형성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지역이 자립적 경제권이 되려면 지역 차원에서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지역경제권은 현재의 16개 광역시도체제보다는 넓은 광역 범위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광역지역경제권이 글로벌 분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지역 산업의 기획·투자·무역진흥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¹⁰⁾

10) 광역경제권과 일치하는 행정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는 현재의 국가체제를 연방제국가로 재구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새로운 광역 행정단위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광역경제권에 포함되는 행정단위들 사이의 조정, 광역경제권과 중앙정부나 국회 사이의 조정을 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병우 외 (2011), 『지방정부 주도의 분권정책 실행 방안: 분권자치형 국가발전 모델 연구』, 한신대 산학협력단.

4. 지속가능성을 위한 프로젝트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는 공통적으로 에너지·식량 자원의 제약조건 변화라는 거대한 사이클 변동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는 산업혁명 이후 최대의 경제사적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19-20세기는 서구의 산업화와 시장 확대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이는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지구 차원에서의 자원 제약을 고려하면 이러한 산업혁명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지고 있다. 서구시장에 의존해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동아시아 성장모델은 20세기 후반의 특수한 조건에서 형성된 것인데, 서구적 성장도 동아시아적 성장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장과 발전을 중단하는 것이 집합적 의사결정의 결과가 되기도 어렵다. 국내적 차원은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도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구체적 방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이다.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가 매우 근본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경제’ 차원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프로젝트로서의 에너지 전환과 농업·농촌 발전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1) 에너지 전환

기술의 채용은 종종 느리고 과묵하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사회가 필요한 정도의 수용성을 갖추면 그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기도 한다. 태양과 바람은 지금까지는 보잘 것 없는 에너지원으로 취급되고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화석연료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원자력 이용의 한계는 분명해졌다. 이제 진부한 해결책만을 반복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치고 있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 기존에 주어진 성장·발전 가능성의 한계를 돌파하는 출발점 직전에 있다.¹¹⁾

최근 일본의 상황은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발전 모델로 만들어내는 것이 분초를 다투는 절박한 과제를 보여준다. 지난해 3월 11일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된 이후 원자력 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가 되고 있고, 올해 5월 5일에는 홋카이도의 도마리 원전 3호기가 정기검사를 위해 발전을 중단하면서 원전 제로 상태가 되었다. 도쿄전력은 이미 기업들에 대해 전기요금을 평균 17% 인상한다고 발표했고, 전력 부족이 예견됨에 따라 천연가스를 이용해 열과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11) 이하 이일영 (2012), 성장·발전 동력으로서의 에너지전환 『창비주간논평』, 2012.5.23.에 의거함.

마침 한국은 에너지 전환의 국제·지역협력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아직 머뭇거리고 있지만, 일본은 에너지 전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의 연결점이라는 지정학적 유리함이 있고, 건설·조선·IT·물류 분야의 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결국은 탄소를 바탕으로 한 산업구조의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슈퍼그리드'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슈퍼그리드의 의미는 광활한 지역에 퍼져 있는 풍력·태양열·원자력 등 각종 발전시설과 여러 도시를 잇는 고압전력망을 지칭한다.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의는 바람과 햇볕이 남아도는 몽골 사막에서 전기를 만들어 일본이나 한국의 대도시에 공급하자는 계획을 주장하고 있다.

몽골의 풍력자원의 잠재력은 연간 일본 전력소비의 8배, 한국 전력소비의 23배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러 국가와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다. 우선 한국·중국·일본 정부 사이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중국·일본은 나라별로 에너지 공급과 소비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강력한 국가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조절해야 하고 낮게 형성된 전력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국가간 송전망 개발, 전력 거래의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과제로 하는 네트워크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은 지역의 성장·발전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은 중앙정부 주도의 위계적 산업정책과는 잘 맞지 않는다. 수평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이라는 대세에 부합하여 광역경제권 형성과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정책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아직 본격 추진되지는 않고 있으나, 호남권, 대경권, 충청권 등 3개 광역경제권이 재생에너지 및 그린에너지 산업분야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광역경제권 간에 중복투자를 피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방분권과 민간주도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대학·연구소·기업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 학교기업의 창업, 여러 기업들의 조인트 벤처 설립 등 다양한 조직 형태의 실험이 필요하다.

특히 호남권과 같은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자연여건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유리한 점이 있다. 호남권 면적은 전국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와 GDP는 10% 수준이다. 이에 비해 전국 최대의 일조량, 긴 해안선, 높은 조수 차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륙붕이 길게 이어지고 수심이 얕아서 풍력발전기 타워를 설치하는 데 유리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호남권은 세계 굴지의 해상풍력 에너지 생산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 에너지 자립체제의 실험도 필요하다. 분산형 에너지체제는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난방설비의 보급을 통해 형성된다. 기업의 창업과 이주, 생태 관광의 증가, 비전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정치에 통합한 핵심그룹,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와 연계된 연구센터,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투자자로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 기업이나 발전업자, 주민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2) 농업·농촌 발전

산업혁명은 농촌과 도시의 근본적 분리를 가능케 했지만, 이제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 사용의 한계는 현재와 같은 도시생활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도시의 일상생활을 농업·농촌과 연계하는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야 한다.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전세계 식량시장은 농업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각국의 가격안정화 정책 등에 힘입어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여 재고를 확보할 수 있었고 낮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러한 시장의 안정성은 흔들리고 있다. 식량시장이 금융시장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시장집중도가 상승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하고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08년과 2010/11년의 식량위기이다. 여기에는 곡물의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 유가·환율·유동성자본 등 거시경제변수의 영향, 각국의 수출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OECD-FAO에 의하면 2010-19년간 밀과 사료가격이 10-3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¹²⁾

식량위기에 대응은 초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각국은 경쟁적으로 수입·비축·해외개발 등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간 합동으로 해외곡물유통망을 구축하고 해외농업개발은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식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은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식량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최근 식량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비상시 3국간 신속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농업정책 당국자간 네트워크를 상시 가동하고, '농산물시장안정기금' 조성, '식량안보프로그램' 공동 설계, 정책협력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여타 복지프로그램에 앞서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를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2011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60% 수준까지 떨어졌다. 농산물가격의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이다. 농업 생산은 증가하고 효율성도

12) 김용택 (2011).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 한국농업정책학회 2011년도 하계학술대회.

향상됐지만 투입재 가격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농산물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낮아 실질 총소득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농간 소득격차와 농촌내 소득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WTO에서도 허용된 것이고 선진국들에서는 모두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체할 이유가 없다.

생산 차원에서는 지역과 협동조합이 연계하여 새로운 농공상 융복합 산업과 도농복합지역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한다. 소규모 지역단위에서는 발전 주체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자체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외부의 전문 인력과 자본을 결합하여 안전성·신뢰성·환경성을 지향하는 혁신을 추진한다. 공간적으로도 제1지역(농업-서비스업), 제2지역(제조업-서비스업), 제3지역(도심기능-서비스업)이 계획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협동조합의 발전은 국가의 지원·지배로부터 독립한 비자본주의적 경제로 지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킨다.¹³⁾

지역 차원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계하는 로컬푸드시스템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로컬푸드 시스템은 소규모 지역내의 자급이라는 협소한 이해관계를 관찰하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공정한 먹거리를 소비자와 생산자가 교환하는 지속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지역 수준에서 생산·유통·가공·외식·급식·소비의 여러 주체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도농 상생과 교류를 통해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¹⁴⁾

5. 국가·민족에서 네트워크·지역으로

미국 헤게모니의 쇠퇴, 국가사회주의의 실패, 위계적 발전국가 모델의 한계, 에너지·식량 자원의 제약조건 등으로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는 더 이상 20세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변화하는 현실의 제약과 모순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실천적·이론적 프로젝트를 요청하고 있다. ‘한반도경제’의 문제의식은, 정치경제적·사회과학적 기획으로서 네트워크형 조직으로 남북한 내부를 개혁하고 네트워크 관계로 남북한과 세계가 연계되는 글로벌 지역(global local, glocal)을 지향하자는 제안이다.

서구에서 국민국가는 17세기 이래 인구·영토·주권의 보유자로 성공적인 길을 걸어왔다.

동아시아의 경우 국민국가의 형성이 서구에 비해 훨씬 지체되었다. 국민이나 그에 기반을 둔 국가는 조선말과 대한제국 시절에 서양으로부터 일본과 중국을 거쳐 유입된 개념이다.¹⁵⁾ 그러나 국가나 그 주권자로서의 국민 개념은 순조롭게 정착되지 못했다. 제국주의에 의해 한반도에서 국민과 국가는 철저히 몰락하고 말았고, 해방 이후 국가는 성립하였지만 그것은 매우 불완전한 존재였다.

국가는 현실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남북한 양쪽에서 국가의 정통성을 절대시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부국강병 일본도로 질주하다가 자멸하고 말았던 일본제국주의의 무모함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국가를 이용하려는 경우도, 국민이 허약하고 국가가 불완전할 경우 국가사회주의가 실패했던 길을 따라갈 위험을 안고 있다.

민족 개념은 일본제국에 저항하는 언어로 수용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민족 개념이 통일과 완성된 국민국가 형성을 지향하는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남북한 양측에서 민족 개념은 분단을 유지하고 국가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민족경제 개념은 분단체제의 기형적 성격과 그것이 강요하는 억압과 모순을 드러내주었지만, 글로벌화 속에서 한계에 직면한 국가사회주의나 위계적 발전국가 모델의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체제 원리를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한국에서 진보 이념은 시장원리에 대한 국가개입(또는 계획원리)의 우위, 남북한 통합을 통한 단일한 국민국가·국민경제의 형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과 국가간 경제통합만으로는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카오스에 대응할 수가 없다. 위계적 조직으로서의 국가가 새로운 질서의 목표·상태일 수 없고 그에 도달하는 주요한 수단·과정이 되기도 어렵다. 대안은 ‘한반도경제’, 즉 시장·기업·정부·네트워크가 공존하는 조직생태계, 다양한 조직형태가 수평적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이다.

13) 아이쿱 생협은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새로운 지역을 만들고 있는 사례이다. 아이쿱은 과산유기식품산업단지예 목장·농장·생태마을·병원 등 문화복지시설과 식품 생산·가공·물류 기능 외에 유통·주거와 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아이쿱생협벨리’를 조성했다. 또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친환경식품 가공업체 26개 업종을 입주시켜 가공·유통기능을 통합한 친환경산업단지를 만들었다.

14) 허남혁 (2011). 한국의 로컬푸드 운동 및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 농업·농촌 발전의 대안 모색』, 농정연구소.

15) 강동국 (2009). 근대한국의 국민/인종/민족 개념,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1980년대 독일 녹색당의 평화 구상과 통일 정책¹⁾

이동기(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머리말

‘녹색정치(Green politics, green politics 생태정치)’의 구상과 실천에서 탈핵을 비롯한 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생태적 전환 그리고 국제정치 및 일상문화에서의 평화적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형성의 지향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생태주의적 관점과 평화에 대한 관심은 각기 독자적 영역과 차원을 유지하면서도 점점 더 결합하고 상호 보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²⁾ 그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결합한 평화 개념으로서 ‘지속가능한 평화’는 ‘녹색정치’의 핵심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지속가능한 평화’의 개념적 지평은 일차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이나 에너지 고갈과 천연자원 재분배를 둘러싼 생태 위기와 갈등의 예방과 해결 및 극복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식 지평과 실천 관심을 확보한다고 해서 여전히 화급한, 20세기 후반의 ‘전통적인’ 갈등과 대결의 양상들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경우 그 두 문제는 혼재와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증폭되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지속된 고유한 군사적 정치적 갈등의 핵심은 국제적 냉전들(cold wars)과 지역 분열의 문제였기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문제 또한 ‘지속가능한 평화’의 핵심 주제에 속한다. 특히 분단 국가에서 ‘평화가 지속가능’하려면 냉전의 군사적, 정치적 대결을 ‘평화주의적(pacifistic)’으로 조정 및 해결하는 일과 그것을 넘어 분단 극복 내지 민족통일의 전망을 제시하며 공생의 정치공동체를 만드는 과제가 최근 20년 동안의 전지구적 ‘지속가능한 평화’의 과제들과 결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이 글은 학술회의 발표용에 불과하고 아직 미완성입니다. 인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 이에 대해서는 Jürgen Scheffran, "Frieden und nachhaltige Entwicklung", Hans J. Gießmann/Bernhard Rinke (Hg.), *Handbuch Frieden* (Wiesbaden: VS Verlag, 2011), pp. 310~323; Alexander Carus/Eileen Petzold-Bradley/Stefanie Pfahl, "Umweltpolitik und nachhaltige Friedenspolitik. Ein neues Thema auf der internationalen Agenda",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2/2001, pp. 6~13을 참조하라.

결국, ‘한반도 녹색평화’의 구상은 한편으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위기의 갈등 극복과 위기에방에 대한 노력과 결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평화(peacelessness)’³⁾의 일차적 조건인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지혜를 모아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동시에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애초 ‘녹색정치’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새로운 관계맺음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통해 생태주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현실정치 영역에서 어떤 구체적 대안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녹색정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태적 전환이라는 문명사적 과제의 맥락에서 ‘비평화’의 구체적 발현 현실과 그 ‘복합구성(configuration)’⁴⁾의 극복을 어떻게 사유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근본적 ‘평화주의’ 지향이 어떻게 그 ‘비평화’의 구조적 근간인 냉전과 분단의 동시적, 병행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기왕의 관성적인 논의를 넘어 더 많은 사유와 숙고, 토론과 비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1980년대 서독의 녹색당(Die Grünen)의 경험이 흥미로울 수밖에 없다. 1980년 창당한 서독의 녹색당은 환경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내세우며 곧 급속한 정치적 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1990년 독일통일 국면에서 순식간에 몰락한 우여곡절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80년대 초기 전 유럽적, 전독일적 평화운동의 위세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폭 속에서 녹색당은 ‘반정당의 정당’으로서 새로운 정치 이슈와 매력적인 정치문화를 통해 순식간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녹색당은 이미 1980년대 후반에 당시 야당이었던 시민당의 잠재적 연정파트너로 운위되었다. 하지만 곧 민족문제(‘독일문제Deutsche Frage’)에 대한 정치적 책임의 방기와 무능력을 드러내면서 어렵게 쌓아올린 정치적 지지를 한꺼번에 잃는 결과를 겪었다. 즉 독일통일의 해 1990년 12월 2일 연방총선에서 서독 녹색당은 4.8%를 얻어 정치적으로 몰락했다. 물론 독일 녹색당은 1990년대 전반기 재기의 몸부림을 통해 그 후에는 시민당과 함께 연정(1998-2005)을 구성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바덴-뷔르템부르크(Baden-Württemberg) 주 의회 선거에서 24.2%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제1당이 되어 주정부의 연정을 구성하면서 위용을 자랑했다. 하지만 1990년의 선거 패배의 경험은 그들에게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이 글은 일차적으로 서독의 녹색당이 1980년대 평화와 통일의 문제에 어떤 정책과 전망을 가졌는지를 살핀다.⁵⁾ 그리고 평화정책과 통일정책이 녹색당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초들겠다. 그것은 역사적 배경이 전혀 다른 외국의 예지만 한국 같은 분단국의 녹색정치 지향(또는 세력)이

겪을 수 있는 유사한 맥락과 차원을 드러내기에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 역사적 경험과 맥락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생태주의 지향의 ‘녹색정치’가 평화 정책과 분단 문제 해결과 민족통일 전망에 대해 어떤 지평을 가지는 것이 의미 있을지를 성찰하여 향후 이와 관련된 지적 논의의 전진과 정치적 상상력의 증진을 보조하고자 한다.

2. 1980-1990년 서독 녹색당의 성쇠와 평화 문제

먼저 흥미로운 것은 서독에서 녹색당이 정치 무대에 등장했을 때 그 정치적 결집의 결정적 계기는 심각한 환경위기나 전쟁위험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1970년대 후반 당시 집권 시민당 정부에 대한 실망이 다양한 좌파적 정치 조류들로 하여금 녹색당으로 결집하게 만들었다. 창당 과정을 기억하는 고참 녹색당원들의 회고에 따르면, 시민당 소속의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수상이야말로 “사실상의 녹색당 창립자”였다.⁶⁾ 그는 전임자인 빌리 브란트와는 달리 환경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생산주의/개발주의적 경제 성장 모델 추종자였다. 더구나 그는 시민당 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토의 핵재무장과 군비증강을 발의하고 나섰다. 슈미트 수상은 1977년부터 당시 소련의 SS-20 중거리 핵미사일에 대항하여 서유럽에 지상발사 크루즈 미사일(groun-launched cruise missile: GLCM)과 퍼싱 투(Pershing II) 핵탄도 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는 한 핵군비 증강 결정(‘이중결정’: double-track decision, Doppelbeschluss)을 발의하고 추진했던 것이다.⁷⁾ 이는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평화운동의 파고를 일으켰고 이미 탈핵과 환경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지향하며 다양한 ‘신사회운동’을 벌이고 있던 신좌파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시민당에 기대는 정치노선을 청산하도록 자극했다.

시민당 바깥의 좌파적 정체성과 지향을 가진 사람들은 서독 중앙 정부의 정책에 실망하여 곧

5) 이 글에서 참고한 일차자료는 베를린 시 소재 독일 녹색당 문서보관소인 녹색기억아카이브(Archiv Grünes Gedächtnis 이하 AGG)의 소장 자료이다. 녹색당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 동독정책과 동서독 관계 및 통일정책까지를 포괄하는 용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그 중 볼 만한 문헌으로는 개괄적인 상황을 정리한 다음의 논문들과 연구서를 들 수 있다. Gerd Langguth, ‘Die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in: Manfred Langner (Hg.), *Die Grünen auf dem Prüfstand-Analyse einer Partei* (Bergisch/Gladbach: Gustav Lübbe Verlag, 1987), pp. 423~480; Annette von der Heyde,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in: Werner Weidenfeld/Karl Rudolf Korte (H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am Main, 1992), pp. 209~216; Hubert Kleinert, *Aufstieg und Fall der Grünen, Analyse einer alternativen Partei* (Bonn, 1992), pp. 135~142. 가장 유용한 정리는 Helmut Lippelt, *Die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in 80er Jahren, Dokumentation eines Diskussionsforums am 10. März 1994 in der Hessischen Landesvertretung Bonn, Bündnis90/Die Grünen Bundesvorstand, Bonn 1994, AGG, 1999/D040*이다. 이 글은 매우 분석적이고 유용한데 결국 출간되지 못했다. 한편, 녹색당의 외교 및 평화정책 전문 정치가였던 폴머의 책도 녹색당 내부를 이해하는데 -비록 분석적이지 못하지만- 유용하다. Ludger Volmer, *Die Grünen und die Außenpolitik-ein schwieriges Verhältnis. Eine Ideen-, Programm-und Ereignisgeschichte grünes Außenpolitik* (Münster, 1998), pp. 222~240. 한편, 녹색당내 민족좌파 그룹에 대해서는 Dong-Ki Lee, *Option oder Illusion? Die Idee einer nationalen Konföder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1949-1990* (Berlin: Ch, Links Verlag, 2010), pp. 254~271을 참조하라.

6) Ludger Volmer, *Die Grünen, Von der Protestbewegung zur etablierten Partei-Eine Bilanz* (München: C. Bertelsmann, 2009), p. 85.

7) Anton Notz, *Die SPD und der NATO-Doppelbeschluss: Abkehr von einer Sicherheitspolitik der Vernunft* (Baden-Baden: Nomos, 1991)를 참조하라.

3) ‘평화부재’ 또는 ‘비평화’ 개념에 대해서는 서보혁,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작동방식’, 이동기, ‘디터 쟁하스의 평화이론: ‘복합구성’으로서의 평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인문학연구단, <한반도 비평화 구조와 분단: 이론과 실제>, 2012년 5월 17일, 발표문, 3쪽과 53쪽을 참조하라

4) ‘복합구성(configuration)’의 개념은 독일의 대표적 평화이론가인 디터 쟁하스(Dieter Senghaas)로부터 수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동기, ‘디터 쟁하스의 평화이론’을 참조하라.

곳곳의 평화운동과 반핵원전운동(Anti-Atomkraft-Bewegung) 속에서 ‘움직이며’ 당을 만들었고, 그 ‘운동당(Bewegungspartei)’은 금방 제3당을 노리는 4당의 지위로 상승했다. 1970년대 후반 서독 여러 주에서 다양한 정치세력과 사회운동 단체들 및 개인들이 주차원에서 창당을 준비한 끝에 1980년 1월 13일 칼스루헤(Karlsruhe)시에서 연방차원의 녹색당이 결성되었다. 초기부터 녹색당은 당의 강령과 진로 및 타당과 중복 당원 가입 문제 등으로 격렬한 논쟁과 내홍을 겪었다. 비록 1980년 10월 연방총선에서 녹색당은 1.5% 지지율을 획득하며 의회 진입에 실패했지만 곧 1981년 서베를린시, 1982년 함부르크 시와 헤센과 니더작센 주 선거에서 5% 장벽을 돌파하는 성공을 거쳐 1983년 총선의 정당명부 투표에서 5.6%를 얻어 27명의 연방의회 의원을 배출했다. 이윽고 1985년에는 헤센 주에서 처음으로 주정부의 연정에 하위파트너로 참여해 시민당과 함께 집권했으며, 1987년 총선에서는 8.3%의 정당 지지율을 확보해 44명의 연방의회 의원을 배출했다.⁸⁾

요컨대, 녹색당의 정치적 결집과 상승 과정에서 평화정착의 문제는 환경문제 못지않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979년부터 1983년까지의 시기는 동서진영 간 ‘제2차 냉전’의 국면이 진행 중이었고 이에 대항하는 유럽 전역의 평화운동 시기였다.⁹⁾ 녹색당은 평화운동의 전면에서 ‘전위’이자 ‘운동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주면서도 연방의회로의 진입이라는 특이한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다.

핵무장 반대 운동과 평화정착의 문제야말로 녹색당의 초기 혼란 국면에서 다양한 조류의 당원들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었던 주제였다. 서독 녹색당의 평화정책은 ‘1980년 연방당강령(Bundesprogramm 1980)’에 그 기초가 담겨져 있고 이는 1981년 당 대회에서 발표된 ‘평화선언’과 1983년의 당 대회 선언인 ‘우리는 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 등을 통해 반복 내지 보충되며 1980년대 내내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¹⁰⁾ 이 선언문들에서 표명된 내용은 전통적인 분류로 본다면 외교·안보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항상 평화정착이 핵심이기에 ‘평화정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녹색당의 공식문서에 나오는 ‘제3세계’ 관련 부분도 상당 부분 평화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녹색당은 위의 대표적 선언들에서 자신들의 외교정책을 “생태적 외교정책”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비폭력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녹색당에 따르면, “세계정책” 내지 “유럽평화정책”이란

8) 독일의 녹색당의 역사는 Markus Klein/Jürgen Fallner, *Der lange Weg der Grünen, Eine Partei zwischen Protest und Regierung* (München: C.H. Beck, 2003); Andrei S. Markovits & Philip S. Gorski, *The German Left: red, green and beyond* (Cambridge: Polity Press, 1993)를 참조하라.

9) Susanne Schregel, *Der Atomkrieg vor der Wohnungsfür. Eine Politikgeschichte der neuen Friedensbewegung in der Bundesrepublik 1970-1985* (Frankfurt am Main: Campus, 2010), pp. 53~77.

10) “Grundsatzprogramm Bundespartei 1980”: “Friedensminifest, verabschiedet von der 4. Ordentlichen Bundesversammlung der Grünen”, Offenbach, 2.-4.10.1981, AGG, Grün 041-01(1980), SBe 258-1(1); “Wir müssen raus aus der NATO”, Erklärung zur Friedenspolitik, verabschiedet von der 6. ordentlichen Bundesversammlung vom 18. bis 20. November in Duisburg. 이하 내용은 주로 이 세 선언문을 참조함.

이름으로 내건 외교와 안보 및 제3세계 문제와 관련된 “평화 정책은 내외부의 모든 형태의 공격과 군사주의, 군비경쟁과 군비팽기 등에 반대하며 인간들의 평화로운 연대와 공생을 지향한다.” 이와 같은 선언적 차원의 언급을 넘어서면 녹색당의 평화정책은 주로 유럽차원의 냉전적인 군사적 적대와 대결을 극복하는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정치적 조류들의 이질적 평화정책 구상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86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녹색당 전체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합의된 주장이었다.

먼저, 녹색당은 양 군사동맹, 나토(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와 서독의 ‘나토(NATO)로부터의 탈퇴를 주장했다. 퍼싱 투와 크루즈 미사일의 서독 내 배치에 대한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녹색당은 서독이 아예 나토로부터 탈퇴하고 그것을 통해 나토의 해체를 이끌어내기를 희망했다. 녹색당 정치가들은 당시 서독이 나토회원국으로 머물면 전쟁의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재앙을 경고했다. 그들은 나토는 평화와 어울리지 않다고 보았고 그것의 개선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를 해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일방적 군비축소’는 이미 1980년 창당 강령부터 녹색당이 지속적으로 내세운 핵심 안보·평화 정책이었다. 게다가 1987년 연방총선을 위한 녹색당 선거강령에는 그것이 외교·안보 정책의 한가운데에 섰다.¹¹⁾ 녹색당은 ‘일방적 군비축소’를 통해 국제체제의 구조 변화를 도모했는데 그 변화는 단순히 군비 축소 뿐만 아니라 군사블록의 해체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연방군(Bundeswehr)을 비롯한 모든 군사기구의 해체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의 인식에 따르면, ‘일방적 군비축소’로의 한 걸음이 다차원적인 군비축소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무기 없는 세계’라는 궁극 목적의 전제였다. 구체적인 강령적 요구에는 퍼싱 투와 크루즈 미사일의 무조건적 철수와 제거, 군비예산의 35% 절감, 화학무기 제거, 독일 내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군복무 및 대체 복무 기한의 과감한 단축, 여군 불허 및 군비수출의 금지 등이 들어 있었다.¹²⁾

셋째, 녹색당은 1987년까지 평화운동에서 발원한 ‘사회적 방위’ 개념으로 군사적 해결에 대비되는 자신들의 대안적 평화관을 설교했다. 녹색당의 이해에 따르면, ‘사회적 방위’는 안팎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방어였다. 그것은 억압자와 협력할 용의가 없는 민중을 영구히 지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근거했다.¹³⁾ ‘사회적 방위’ 개념은 “무기는 버리되 무방비상태는 아니다(Ohne Waffen-aber nicht wehrlos)”¹⁴⁾라는 구호 아래 비폭력 저항의 원칙을 따른 것이었다.

11) “Bundestagswahlprogramm 1987”, AGG, Grün 043-9.

12) “Einseitig abrüsten, wir machen den ersten Schritt, Friedenskonzept 1987”, AGG SBe 258-6.

13) Graswurzelrevolution, “Soziale Verteidigung”, AGG SBe 950-19(1987).

14) Die Grünen, “Ohne Waffen, -aber nicht wehrlos. Das Konzept der Sozialen Verteidigung”, Bonn 1987.

녹색당은 이 개념을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의 역사와 흐름 속에 위치시켜 공상적이 아니라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켰고, 특히 1968년 소련군 점령에 대항한 체코 시민들의 저항을 그 전거로 삼았다. 물론 이 개념이 지닌 모호함 때문에 토론은 그치지 않았다. 이를테면 1986년 5월 16일에서 19일까지 하노버 시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는 '사회적 방어'가 수세적 무장 방어와 양립불가능한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¹⁵⁾ 다수파의 입장은 그 둘의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상당기간 이런 입장은 당의 공식 입장을 지배했다. 녹색당의 전설적 여성 지도자인 페트라 켈리(Petra Kelly)는 녹색당 연방위원이었던 동료 롤란트 포크트(Roland Vogt)와 저명한 평화이론가인 테오도르 에베르트(Theodor Ebert)와 함께 '사회적 방어 동맹'을 결성해 비폭력 평화문화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여 나갔고, 많은 녹색당 당원들은 이에 적극 참여했다.

그 외에도 1980년대 녹색당의 평화 강령에는 냉전의 양대 열강인 미국과 소련에 대한 양면적 비판, 특히 군비증강과 '제국주의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독일 내지 유럽 중립화 방안 등도 눈에 두드러진다. 물론 예상할 수 있듯이, 이 '녹색평화구상' 내지 '녹색안보전략'은 줄곧 비현실적이며 망상적이고, 심지어 위협하다는 비판과 조소를 받았다.¹⁶⁾ 물론 1980년대 후반의 동서 진영 간 화해와 군축 과정 그리고 1990년 이후의 유럽 냉전 극복과정은 녹색당의 애초 구상과 조응하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녹색당의 평화 정책과 실천에 대해 인색한 평가는 이해할 만하다. 그렇지만 소련에서의 고르바초프의 등장 자체와 미소 간 핵군축협상의 현실화에 평화운동과 녹색당의 평화구상 제안이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부적절하다. 1980년대 중반까지 독일과 유럽 정치무대에서 가장 완강하며 지속적인 군축 문제 제기와 다양한 급진적 평화구상으로 냉전적 정치의 종결을 자극했다는 점에서 녹색당의 평화구상은 적절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다만 문제는 녹색당이 그토록 격렬히 비판했던 미국과 소련의 정치지도부가 그들의 파국론적 진단과는 달리 1985년부터 핵군축협상을 진행하며 1987년 결정적 진전을 보이면서 원래의 녹색당의 평화정치 강령의 함의와 파괴력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 시기에 녹색당 내부에서도 기왕의 완고한 입장에 일부 변화가 생겨났다. 녹색당 내부에서는 여러 문제들, 즉 나토 존속 내지 독일의 나토 회원국의 지위 유지 문제, 일방적 군비축소나 군비통제 협상이냐의 선택 문제, 사회적 방어 개념의 유용성, 중립화 구상 내지 블록 체제 해체 주장의 유지냐 포기냐 등 모든 영역에서 이견들이 속출했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 녹색당은 초기와는 달리 더 이상 평화를

주제로 한 논의에서 탄력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내부 혼란과 분란을 축적해갔다.

1987년이 되면 녹색당은 사실상 내분의 위기에 직면했다. '현실주의정치가들(Realos, Realpolitikers, 현실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Fundis)' 사이의 화해하기 어려운 이견과 대결을 넘어 여러 정파들이 다양한 주장들을 놓고 대결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헤센 주 출신의 요시카 피셔(Joschka Fischer)와 후베르트 클라이네르트(Hubert Kleinert)와 서베를린의 오토 실리(Otto Schily)와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의 레쥔 쉴라우크(Rezzo Schlauch)등으로 대표되는 '현실주의자들' 내지 '대서양주의자(Atlantiker)'들은 점차 군사동맹 해체와 서독의 나토회원국 지위 문제에서 기존의 당 노선으로부터 이탈하며 사민당과의 연정을 위해 현실 정치적 입장을 강화했다. 다만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 선회에 대항해서 아직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페트라 켈리와 게르트 바스티안(Gert Bastian) 같은 근본주의자들, 유타 디트푸르트(Jutta Ditfurth), 토마스 에베르만(Thomas Ebermann)과 라이너 트람페르트(Rainer Trampert) 같은 '생태사회주의자'들 그리고 당 공동대표였던 루카스 베크만(Lukas Beckmann)과 독일정책 대변인이었던 디익 슈나이더(Dirk Schneider)¹⁷⁾ 같은 '전통좌파들(Traditionslinke)'과 1988년부터 등장한 중도주의와 통합 지향적 입장을 지닌 안트예 폴머(Antje Vollmer) 중심의 '출발 그룹(Aufbruch-Gruppe)'과 루드거 폴머(Ludger Vomer) 중심의 '좌파-포럼(Linkes Forum)' 등은 모두 여전히 군사동맹 해체를 녹색당의 핵심 평화정책으로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¹⁸⁾ 그렇다고 해서 당의 다양한 정파들에서 독일문제 해결과 유럽 평화와 관련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 의견이 일치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동독과의 관계에 대해서나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녹색당은 더욱 혼란스런 상황이었다. 이 때 그것은 반드시 당 내 이견의 등장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무관심과 무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15) Protokoll der außerordentlichen Bundesversammlung der Grünen in Hannover, 16.-19. Mai 1986, AGG Grün 130-6.
 16) Ludger Volmer, *Die Grünen*, p. 202; Wolf Dieter Karl, "Zur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 der Grünen", in: Manfred Langner (Hg.), *Die Grünen auf dem Prüfstand*, pp. 397~421.

17) 서독 녹색당의 동독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슈나이더는 나중에 동독의 '비공식 직원(Inoffizieller Mitarbeiter, IM)'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는 Udo Baron,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und das MfS", in: *Jahrbuch Extremismus & Demokratie* 11 (1999), pp. 57~58; Udo Baron, *Kalter Krieg und heißer Frieden. Der Einfluss der SED und ihrer westdeutschen Verbündeten auf die Partei „Die Grünen."*, (Münster, 2003), pp. 217~218을 참조하라.
 18) 이에 대해서는 Udo Baron,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und das MfS", pp. 47~77; Dong-Ki Lee, *Option oder Illusion*, pp. 268~270을 참조하라.

3. 1980년대 서독 녹색당의 '통일정책'

1) '독일정책의 부재'

1980년대 동서독 관계는 1970년대의 동방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했다. 1980년대 중반 양독 정상들이 주고받은 “이성의 연합” 이니 “책임공동체” 니 하는 용어들은 단순히 외교적 의례의 포장 말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재결합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합의는커녕 아예 그에 대한 토론이나 강령적 숙고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양국 정치지도부는 성급한 통일 논의가 동서독 관계의 현실적 발전에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좌파 야당인 사민당의 다수 정치가들과 학계와 언론계 및 문화 부문에 다양하게 포진했던 자유주의좌파와 급진좌파 지식인들의 대다수 그리고 녹색당은 한걸음 더 나아가 ‘이(二)국가상태(Zweistaatlichkeit)’의 확정을 주장하며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다.¹⁹⁾ 특히 녹색당 소속의 대다수 정치가들은 이미 1970년대부터 확인된 양독의 ‘이(二)민족화(Bi-Nationalisierung)’ 테제에 근거해 탈민족적(postnational) 현실발전에 기초해 초민족적(supranational) 유럽 구상에 더 매달렸다. 그렇기에 국민국가로의 통일 정책을 숙고하고 강령을 마련하는 일은 대다수 녹색정치가들에게 시대착오적이거나 위험한 일에 불과했다.

특히 사민당 내 이국가주의자들에 비해 녹색당의 많은 정치가들은 독일분단을 나치독일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징벌’로 받아들이며 독일통일 주장에 반감을 보였다.²⁰⁾ 독일과 유럽의 평화정착은 독일의 이국가상태를 전제로 한 새로운 통합유럽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녹색당은 단순히 두 개의 동등한 독일 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데서 더 나아가 전독일적인 민족의식과 민족정체성의 고취를 자기기만으로 간주했다. 그렇기에 녹색당의 독일정책은 ‘독일정책의 부재(Nicht-Deutschlandpolitik)’라고 말할 수 있다. 1984년 11월 녹색당 연방의원단은 “독일정책 강령 제출이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지만 끝내 제출되지 못했다.²¹⁾ 아울러 1980년 전반에는 몇 차례에 걸쳐 대규모 녹색당 독일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²²⁾ 그렇지만 독일정책은 녹색당의 공식 강령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 게다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녹색당 연방의원단은 총 1932개의 정책 발의와 질의와

요구 그리고 보고를 했지만 단지 18개만이 독일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2) '칼을 쟁기로': 평화·인권정책으로서의 독일정책

그렇지만 이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녹색당이 적극적인 통일정책이나 분단극복 강령을 구상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동독 정책과 동서독 관계에 대한 입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녹색당은 독일정책을 항상 평화정책의 일부로 보았다. 그렇기에 녹색당은 다른 정당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독과의 선린 정책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녹색당의 지도적 정치가들은 1980년 동독 사통당(SED,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서기장이자 동독 국가평의회 의장인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제시한 ‘게라요구들(Geraer Forderungen)’에 가장 전향적으로 응했다. 동서독간 국적 구분 인정, 상주대표부의 대사관으로의 전환, 잘쯔기터 중앙기록보존소의 폐지, 엘베 강 중간에 동서독간 경계 확정 등의 요구에 녹색당은 평화와 선린관계를 위해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였다.²³⁾ 그것은 녹색당이 다른 정당보다도 가장 단호히 이국가상태의 역사적 확정을 분명히 주장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심지어 녹색당 연방의원단은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연방내독관계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종류의 반공주의적 유물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를테면 냉전적 선전전을 오랫동안 수행했던 미령라디오방송(Rundfunk im amerikanischen Sektor, RIAS)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며 기성정치권을 자극했다. 아울러 녹색당은 동서독 관계가 대사관급 공식적 차원의 외교로 발전하면 모든 차원의 접촉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는 동서독간 “아래로부터의 연결망”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그와 같은 맥락에 따라 유엔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동독 간 공동의 평화발의(체)를 구상하기도 했으며 녹색당은 양 열강 사이의 “인질”로 양 세계 사이를 오가며 소통하는 “평화정치적 방랑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의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1980년대 동서독 관계의 진전에 따라 모든 정당과 사회 문화 영역의 관계자들이 국경을 오갈 수 있었지만, 상당수의 녹색당 정치가들은 동독으로의 입국이 금지되었다. 녹색당의 주요 정치가들이 시종 동독의 인권유린 문제에 비판과 평화운동 세력을 비롯한 체제 비판적 조류와의 접촉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인권과 평화 문제와 관련한 녹색당의 동독 비판은 다른 정당들 보다 더 규범적이고 근본적이었으며 직접적이고 도발적이었다. 1983년 5월 페트라 켈리와 게르트 바스티안, 루카스 베크만과 루돌프 포르트 등은 동베를린 중심지인 알렉산더 광장에서

23) Gerd, Langguth, "Die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p. 446.

19) 서독 좌파 정치가들과 지식인들의 탈민족 정치 지향과 담론들에 대해서는 이동기,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화』 (2호, 2009), 162~192쪽을 참조하라.

20) 이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1987년 서베를린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행한 요시카 피셔의 연설이다. "Zwischen Wiedervereinigungssillusion und Nato-Austrittsfraktion. Rede von Joschka Fischer zu den Grundsätzen einer neuen deutschlandpolitik, gehalten am 20. November 1987 in der Urania Berlin", AGG 1337, Protokoll der deutschlandpolitischen Debatte der Fraktion Die Grünen im Bundestag am 16. Juni 1984, AGG, B II, 1, Nr. 2715.

21) Gerd, Langguth, "Die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in: Manfred Langner (Hg.), *Die Grünen auf dem Prüfstand*, pp. 423~424.

22) 1983년 11월 3일과 4일 켈른에서 열린 '녹색-대안 운동과 독일문제' 토론회, 1984년 3월 9일에서 11일까지 칼스루헤에서 열린 '독일정책 회의'와 같은 해 11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뮌헨에서 열린 '동맹탈퇴와 독일중립화와 평화조약' 토론회를 들 수 있다.

동독과 소련의 군비감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뒤이은 호네커와의 서신 교환 및 면담에서 동독의 평화운동 단체들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녹색당 정치가들의 동베를린 내 시위는 그 뒤, 즉 1983년 11월 초에도 반복되었는데, 1984년 9월 말 동독 정부는 103명의 녹색당 당원들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녹색당 내에서 누구보다도 동독과 동구권 국가들의 인권 및 평화 활동가들과 접촉을 유지하며 그들을 지원했던 이는 바로 페트라 켈리였다.²⁴⁾ 그 또한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자신의 장기인 ‘편지’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한 긴장완화는 불가능하다”는 그의 언급은 사실 보수 기민련의 정치가들이 동방정책을 비판하면서 즐겨 사용했던 말인데, 녹색당의 한 주요 경향이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물론 녹색당 내 다양한 조류들이 모두 이와 같은 공세적 인권문제 제기에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으로 녹색당의 일부 정치가들이 동독을 방문하면서 동독의 비판적 평화 환경 단체들과의 연대를 보여주지 못한 경우, 그들은 여지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1980년대 녹색당은 동독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태도를 선보였다. 서독의 녹색정치가들은 한편으로는 동독 정치지도부의 주요 요구사항들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지도부에게 인권준수와 평화정책 촉구를 멈추지 않았다. 페트라 켈리가 몇몇 녹색당 정치가들과 함께 호네커를 만났을 때 입고 나왔던 웃옷은 여러 모로 상징적이다. 켈리가 동독 내 체제비판 평화그룹들의 상징 문구 ‘칼을 쟁기로’ (소련에 갈때는 ‘인권을 준수하라’가 적힌 웃옷을 입고)가 적힌 웃옷을 입고 호네커를 대면했던 장면은 그 자체로 매우 자극적이었다. 여기서 다시금 그와 같은 이중전략이 얼마나 동독 내 인권개선과 반체제 운동을 이롭게 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녹색당이 그와 같은 인권문제 비판과 평화정책의 병립을 서독 내 다른 정당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험한 정치 세력이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 녹색당 내 국가연합 통일안

물론 녹색당 내에서도 민족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삼은 집단이 없지 않았다. 1980년대 초부터 시종 서독에서 독일통일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한 대표적 정치 세력에는 녹색당 내 일부 ‘민족 좌파(Nationale Linke)’ 그룹들을 빼놓을 수 없다.²⁵⁾ 1960년대 후반 학생운동과 1970년대 모택동주의적 정치그룹을 거쳤던 일부 신좌파 세력들, 특히 녹색당의 서베를린 지부

역할을 했던 대안리스트(Alternative Liste) 내 ‘베를린 및 독일정책 연구그룹(Arbeitsgruppe Berlin- und Deutschlandpolitik)’과 쾰른 녹색당 중심의 ‘좌파독일토론 발의 그룹(Initiativkreis Linke Deutschlanddiskussion, LDD)’은 민족좌파의 대표적 두 그룹이다.

먼저 1981년 서베를린의 다양한 신좌파 그룹의 활동가들이 결성했던 ‘독일정책 연구그룹’은 선구적인 민족 좌파 이론가인 페터 브란트(Peter Brandt)와 헤르베르트 암몬(Herbert Ammon)의 영향을 받았다.²⁶⁾ 빌리 브란트 전 수상の子들이기도 한 페터 브란트는 1970년대 내내 트로츠키주의 조직에서 활동했었고 암몬 또한 여타 민족지향적 68세대들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동안 민족혁명 사상을 체화했다.²⁷⁾ 한편, 쾰른의 LDD는 1970년대 모택동주의 정치조직에서 민족해방 사상을 자기화한 롤프 스톨츠(Rolf Stolz)의 주도하에 1984년 10월 말 조직되었다.²⁸⁾ 그는 녹색당 창당의 주역이자 1980년/81년에는 당 연방의장단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또 쾰른과 서베를린의 민족좌파들 외에도 녹색당에는 여러 다양한 지역과 세대의 민족지향적 좌파운동가들이 모여들어 함께 세력화를 꾀했다.²⁹⁾

이들 민족좌파 세력은 모두 지금까지의 독일 좌파 내 다양한 민족 담론과 통일 대안들을 숙고하여 1970년대 동방정책 이후 변화한 양독 관계와 제 2차 냉전의 정세에 맞게 새로운 통일안을 구상했다.³⁰⁾ 먼저, 그들은 한결같이 독일문제는 국제적 긴장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원인임을 강조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보기에는 평화문제와 함께 항상 독일문제가 중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독일통일을 국제정치의 주제로 삼아야 마땅했다. 이 때 그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당연히 독일중립화와 유럽평화체제의 건설이었다. 또 독-독간 관계와 관련해서는 사민당 정부 동방정책의 지난 성과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통일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점을 비판하면서 국가연합을 통일의 구체적인 과정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두 주요 민족좌파 세력들은 이론적 입장 및 정치적 주장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테면 LDD 그룹의 좌파들은 과거 모택동주의적 민족혁명파들의 분석에 따라 양 독일 국가를 각각 미국과 소련의 식민지로 규정하며 독일 통일을 일종의 민족해방으로 간주했고 분단국

26) 이 그룹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서는 Gerd Langguth, "Die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pp. 447-454, Alexander Gallus, *Die Neutralisten. Verfechter eines vereinten Deutschland zwischen Ost und West 1945-1990* (Düsseldorf, 2001).

27) 이들의 정치이력에 대해서는 Peter Brandt, "Politischer Lebenslauf", Schwieriges Vaterland (Berlin 1999), pp. 17-30; Herbert Ammon, "Mehr als zwanzig Jahre danach: Ein Rückblick", *Ein Leben für Deutschland. Gedenkschrift für Wolfgang Venohr 1925-2005* (Berlin 2005), pp. 70-71, A. Gallus, *Die Neutralisten*, pp. 340-358을 참조하라.

28) 이 그룹의 탄생에 대해서는 Rolf Stolz, "Initiativkreis Linke Deutschland-Diskussion gegründet!", *Materialbrief Deutschland Probleme-Probleme Deutschland* (이하 MDP), 1. Jg. Nr. 2, November 1984; Jürgen Kraus, "Entstehung und bisherige Arbeit des Initiativkreises Linke Deutschlanddiskussion", MDP, 2. Jg., Nr. 4, Mai 1985, AGG, Bl. 1-2090. 또한 Rolf Stolz, "Die nationale Linke-Phantom, Faktum, Utopie?", *Ein Leben für Deutschland* (Berlin, 2005), pp. 454-455를 참조하라.

29) 1950/60년대 중립화 통일을 주장했던 적지 않은 우파 내지 극우파 민족주의자 전력자들도 녹색당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볼프 쉐케와 아우구스트 하우스라이터(August Hausleiter)였다. August Hausleiter, "Die Situation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im jeweiligen Blocksystem-unter Berücksichtigung der historischen Genese", *Die Grünen Baden-Württemberg*(ed.), *Friedensvertrag-Blockfreiheit-Neutralität, Deutschlandpolitischer Kongreß*, 9-11. März 1984, Karlsruhe 1984, AGG 1998/D0023, pp. 4-20. 하우스라이터는 애초 녹색당의 공동대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곧 과거 나치와의 협력 추구 등의 전력 등이 언론에 알려져 대변인직을 사임했다.

24) Saskia Richter, *Die Aktivistin. Das Leben der Petra Kelly* (München: Deutsche Verlags-Anstalt, 2010), pp. 164~173.
25) 이에 대해서는 이동기, '서독 68운동과 독일정책: 민족좌파로서의 신좌파?', 『독일연구』 17호, 2009. 6, 65-109쪽을 참조하라. 이하의 논의는 이 글을 축약한 것이다.

내부의 지배계급과 적극적 대결정책을 벌여나갈 것을 주장했다. 반면, 서베를린의 민족좌파들은 앞선 시기의 비현실적 혁명론을 청산하고 국가연합안을 매개로 서독의 정치 지배엘리트와 타협할 것, 특히 사민당과 연대할 것을 강조했다. 그들 또한 이론적으로는 민족문제 해결과 사회적 해방 과정의 연관관계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었지만 “전술적이고 역사적인 타협”을 위해 일찍부터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 연정’을 현실적인 정치 과정으로 제안했다.³¹⁾

이렇듯, 녹색당 내 ‘민족좌파’ 그룹들은 독일중립화나 유럽평화체제의 건설을 매개로 양독이 국가연합을 결성하는 것이 통일의 길임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다. 민족문제를 우파들의 수중에 떨어지도록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 해방과 연계하여 사회주의적 통일독일을 달성하자고 주장했던 그들의 외침에 탈민족 지향의 대다수 좌파 세력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이 민족좌파들이 점차 자신들과 유사한 주장과 강령을 들고 나온 (극)우파 민족혁명 세력과 가치보수주의자들과 연대하며 여론사회에 등장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자’라는 의구심만 더 쌓아갔다. 녹색당의 다수 정치가들은 민족주의와 민족담론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한 당내 민족좌파 그룹들을 견제했고, 민족좌파는 1980년대 후반 녹색당 내 영향력이 미미한 소수파로 전락했다.

요컨대, 녹색당과 평화운동 내 민족좌파들의 국가연합 통일구상은 좌파 내에서 오랫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이단적 견해로만 간주되었다. 그런데 1988년 하반기 상황이 급방 변화할 조짐이 일어났다. 사실 1980년대 후반 동서독 관계는 이미 1970년대에 비해 질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사실상의 국가연합 직전 단계에 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현실적 동서독 관계 발전에 조용해 사민당과 녹색당 내에서는 국가연합 통일안에 대한 -물론 아직 미미했지만- 새로운 관심이 생겨났다. 1988년 정치적 후각이 예민한 빌리 브란트 전 총리는 양독 관계가 “국가연합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 시작했다.³²⁾ 아울러 사민당의 열성 당원이었던 저명작가이자 브란트의 정치적 동지였던 귄터 그라스(Günter Grass)와 녹색당 연방의원단 대변인이었던 안트예 폴머는 1990년 총선을 겨냥해 두 좌파 야당이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공동의 선거강령으로 내걸고 민족문제 해결에 나서는 문제를 촉구할 대규모 ‘적녹 좌파’ 토론회를 1989년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준비할 것에 합의했다.³³⁾ 물론, 좌파 내 이 민족문제 대토론회 이전에 이미

30) 민족좌파들의 민족이해와 통일강령에 대해서는 먼저 Berlin-und Arbeitsgemeinschaft in der Alternativen Liste(ed.), *Paktfreiheit für beide deutsche Staaten, Atomwaffenfreies Europa vom Atlantik zum Ural Einheit für Deutschland* (Berlin, 1981); *Paktfreiheit für beide deutsche Staaten oder bis daß der Tod uns eint?* (Berlin, 1982), Peter Brandt, *Schwieriges Vaterland* (Berlin, 1999); Rolf Stolz(ed.), *Ein anderes Deutschland. Grün-alternative Bewegung und neue Antworten auf die Deutsche Frage* (Berlin, 1985), 그리고 LDD 그룹의 MDP 자료들을 참조하라.

31) Peter Brandt & Herbert Ammon, “Wege zur Lösung der Deutschen Frage”; Peter Brandt & Rolf Ascheberg, “Für eine neue Mehrheit”; Peter Brandt & Günter Minnerup, “Osteuropa und die Deutsche Frage”, P. Brandt, *Schwieriges Vaterland*, p. 99, pp. 215-230, pp. 254-272.

32) “Interview mit Willy Brandt”, Erich Kuby, *Deutsche Schattenspiele* (München, 1988), p. 234.

33) Antje Vollmer im Gespräch mit Hans Werner Kitz, *Eingewandert ins eigene Land. Was von Rot-Grün bleibt* (München, 2006), pp. 88~89.

또 다른 통일의 역사적 시간이 독일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결국 ‘운명의 해(Schicksalsjahr)’ 1989년의 빛깔은 ‘적색’도 ‘녹색’도 아니게 된다.

4. “우리는 날씨에 대해 얘기한다.”: 통일 국면의 녹색당³⁴⁾

1989/90년 겨울 녹색당 소속의 대다수 좌파 정치가들은 독일 정책의 여러 측면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애초 동독의 국가적 존속 및 독일통일에 대한 거부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점차 통일문제가 정치 논쟁과 대중적 관심의 전면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중립주의를 내세운 일부 소수파를 제외하면 녹색당 내 주요 조류들은 이국가상태의 지속에 동의했다. 녹색당 연방의원단은 1989년 11월 30일자 결의안을 통해 서독 연방정부의 통일공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오히려 연방정부에게 아무 조건 없는 동독에 대한 시급한 경제적 지원 및 동독의 국가 주권의 인정과 단독대표원칙의 포기를 통한 동서독 협력 관계의 심화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녹색당은 이 새로운 관계의 발전이 독일통일이 아니라 유럽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녹색당도 동독의 정치 상황 및 국제 정세의 변화에 어떻게든 조용해야 했다. 페트라 켈리와 게르트 바스티안 중심의 ‘시민권과 인권 그룹’ 및 당내 좌파들은 이국가상태 원칙과 결별하기가 여전히 어려웠다.³⁵⁾ 반면 ‘현실주의자들’과 ‘출발 그룹’은 1990년 1월 점차 통일 “분위기”에 발맞추기 시작했고 서로 협력해 이를 당 내에서 관철시켰다.³⁶⁾ 결국, 1990년 2월 7일 녹색당 연방의원단은 다수파 결의를 통해 이국가상태의 원칙을 최종적으로 포기했다.

물론 1990년 1월과 2월 초까지의 이 정책 전환 과정에서 녹색당에서는 두 개의 국가연합안이 민족문제 해결책으로 제출되었다. 먼저 소수 정파로 머물렀던 민족중립주의자들 일부, 즉 볼프 슈톨츠와 롤란트 포크트는 이 새로운 국면에서 “하나의 다른 녹색 독일정책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³⁷⁾ 이는 1980년대 평화운동과 녹색당 일부의 ‘민족좌파’가 제기했던 중립주의를 전제로 한 독일 통일의 강령을 그대로 재현했을 뿐이었다. 게다가 이들은 1980년대 전반기와는 달리 이 시기에는

34) 이하의 내용은 이동기, ‘1989/90년 독일통일 과정 시 서독 좌파의 비판과 대안들’, 『서양사연구』, 43집, 2010년 11월, 172~175쪽을 부분 수정한 것이다.

35) Diskussionsbeitrag zur Deutschlandpolitik, Norbert Kostede und Helmut Wiesenthal, am 19. 12. 89, Materialien zur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in den 80er Jahren, Zusammenstellung von Ursula Jaerisch/Elisabeth Weber, AGG, 1999/D04, 108-111.

36) Helmut Lippelt, Die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in 80er Jahren, Dokumentation eines Diskussionsforums am 10. März 1994 in der Hessischen Landesvertretung Bonn, Bündnis90/Die Grünen Bundesvorstand, Bonn 1994, AGG, 1999/D04.

37) Eckhard Stratmann/Eva Quistorp/Roland Vogt/Rolf Stolz, Initiative für eine andere grüne Deutschlandpolitik, den 12. Januar 1990, Materialien zur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in den 80er Jahren, AGG, 1999/04, 118-121.

당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반향을 일으킬 수 없었다. 반면, 당시 녹색당 연방의원단 대변인이었던 안트예 폴머 중심의 ‘출발 그룹’이 제시한 “양독간 생태 국가연합”은 녹색당의 독일정치적 입장과 고민을 잘 보여주었다.³⁸⁾ 그들은 ‘생태국가연합(Ökologische Konföderation)’을 통해 성급한 통일 추구하고 경직된 이국가상태의 옹호 사이에서 중도적 길을 개척하고자 했다. 그들은 국가연합이 민족 간 결속을 현실화하면서도 양 독일의 국가적 존속과 정치적 자치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국가연합만이 동독이 “서독의 시칠리”가 되지 않고 독자적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독의 혁명은 산업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생태적 문제제기를 부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사회적 생산의 구상을 통합하는 사실상의 새로운 사회적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유일무이한 기회 때문에 서독에 대비해 동독의 국가적 자치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노력, 즉 생태국가연합을 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⁹⁾

이 구상은 제목 그대로 “경계를 초월한 생태 문제”를 전면에 내걸긴 했지만 사실 대안적인 생태정치적 구상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골리앗 서독”에 대해 “다윗 동독”을 지키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다. “확장을 통한 부유함”보다는 “다양성을 통한 부유함”에 의거해 독일 양측은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되었다. 아울러 ‘생태 국가연합’ 강령은 이 연방주의적 정치원리와 삶의 원칙에 조응해 “국민국가적 이기주의를 극복하며 지역의 자치를 보장하는 통합 유럽”을 지향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녹색당의 공식 강령이 되지는 못했다. 국가연합이라도 그것이 통일과 연관되는 것이라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녹색정치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와 같은 좌파적 대안도 너무 뒤늦게 출현해 정치적 과급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또한 이미 12월 중순부터 “국가연합, 그것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녹색당 내 ‘현실주의자들’은 처음부터 국가연합이란 “단지 통일의 한 방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상의 이국가상태를 위한 형식적인 껍질”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⁴⁰⁾ 동독 주민들의 통일 정치적 지향에 당혹스러워 하면서 정책 방향을 놓고는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현실주의자들’과

‘출발 그룹’의 암묵적 협력을 중심으로 2월 초 녹색당의 연방의원단은 급속한 국민국가적 통일의 길에 순응하면서 녹색당내에서도 국가연합론은 점차 잦아들었다.⁴¹⁾ 동독의 국가적 존재가 위기에 빠지면서 동독의 존속에 기초해 논의되던 유럽통합 지향의 탈국민국가적 독일국가연합안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1990년 3월 중순 동독의 자유선거로 통일의 방향이 급속한 흡수 통일로 정해진 후에 녹색당의 정치가들은 사실상 그 어떤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정치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1990년 겨울의 연방총선을 준비하면서 녹색당은 그동안의 심각한 내분과 공직과 당직 로테이션 원칙의 엄격함으로 이미 충분히 정치적 동력을 상실했다. 게다가 “모두가 독일을 얘기한다. 하지만 우리는 날씨를 얘기한다”⁴²⁾는 자조적이면서 자극적인 선거 슬로건을 내건 녹색당은 의미 있는 정치적 행위자가 되지 못하고 통일과정으로 빨려 들어갔다. 생태문제로의 선거 강령 집중은 당시 통일국면에서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민족문제에 대한 그동안 정치적 무관심과 정책적 무능력의 대가는 고스란히 참담한 선거결과로 현상했다. 당내 좌파지도자들 및 경험 많은 여러 정치가들은 ‘현실주의자들’에 밀려 점차 당을 떠났다. 이제 연방의회에서 밀려난 서독 지역의 녹색당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했다. 더 이상 ‘날씨를 얘기’ 할 시간이 없었다.

5. 맺음말

현재의 찬연함을 통해 과거의 어두운 골짜기를 망각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잠시의 혼란에 눈을 잃어 그 본연의 결기를 존중하지 않은 것도 공정치 못하다. 1980년대 중후반 독일 녹색당이 평화와 통일 문제에서 드러낸 정책 혼선과 방향 상실을 보고 당시 녹색당의 역사 전체를 과하게 힘 잡을 필요는 없다. 역사는 애초부터 하나의 선도 아니지만 직선이었던 적은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다만, 독일 ‘녹색정치’가 ‘제2차 냉전’의 격동 속에서 집권당인 사민당과 경계를 짓고 평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현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1980년대 중반 이미 연방의회로 진출한 뒤에도 ‘운동당’으로서의 성격에 머물렀던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같은 야당이었던 사민당이나 다양한 서독 평화연구소에서는 이미 ‘유럽공동안보체제’를 비롯한 여러 대안들을 숙고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녹색당은 구체적인 평화 전략 구상에 소홀했으며 초기에 여러 정치 조류들이 합의했던

38) Grüner Aufbruch 1/90, Ökologische Konföderation beider deutscher Staaten: Gemeinsamkeit in Autonomie, AGG, Die Grünen im Bundestag 1983~1990, Bd. II, 1: Deutsche Einheit-Umweltpolitik-Sozialpolitik: Antje Vollmer, "Tips für David, Plädoyer für eine ökologische Konföderation", Frank Blohm/Wolfgang Herzberg (Hg.), *Nichts wird mehr so sein, wie es war, Zur Zukunft der beiden deutschen Republiken* (Leipzig, 1990), pp. 117~125.

39) Grüner Aufbruch 1/90, Ökologische Konföderation beider deutscher Staaten: Gemeinsamkeit in Autonomie, AGG, Die Grünen im Bundestag 1983~1990, Bd. II, 1: Deutsche Einheit-Umweltpolitik-Sozialpolitik.

40) Diskussionsbeitrag zur Deutschlandpolitik, Norbert Kostede und Helmut Wiesenthal, am 19.12.89, Materialien zur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in den 80er Jahren, AGG, 1999/D04.

41) 물론 2월 중순, 그리고 심지어 3월에도 녹색당에는 국가연합안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움직임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다. Faltblatt der Grünen: Konföderation statt Eingemeindung, März 1990, Materialien zur Deutschlandpolitik der Grünen in den 80er Jahren, AGG 1999/D04: 131-134.

42) Luger Volmer, *Die Grünen*, p. 298.

쟁점들에서 오히려 내부 이견을 드러내며 (평화)정치적 응집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녹색당이 독일정책에서 전혀 의미 있는 대안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동서독 주민들 사이에서 서로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민족(내지 국가)정치성의 흐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이다. 서독에서야 분단 일국 정체성이 강화되었지만 동독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국가상태의 불안정성이 하나의 독일민족에 대한 기억의 새로운 환기로 치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한 것이야 굳이 녹색당만의 잘못은 아니다. 덧붙여 녹색당의 인권정치가들은 주로 동독(과 동유럽)의 반체제 운동가들과 교류하면서 오히려 그들의 독자적 국가 재창건 지향을 접해 동독의 주민 대다수 내 면면히 흐르고 있던 ‘전독일 의식’을 놓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여전히 평화교란과 인권억압의 여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른 무엇보다 분단 자체에 기인해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89/90년 역사적 전환기에 독일 녹색당의 너무 이르거나 과한 탈민족 구상은 현실에 발목 잡혔다. 녹색당은 그 대가를 짧게 4년, 길게 8년의 시간으로 치르면 되었다. 하지만 당시 좌파적(또는 생태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독일은 ‘더 나은 민족 재결합’의 기회를 잃은 셈이었다. 녹색당의 정치적 회복에 비해 통일독일의 여러 위기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1980년대 녹색당이 인권문제와 평화정착의 문제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상승적으로 결합하고자 했던 정치적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녹색당의 독일정책에서 더 많은 정치적 양보와 선린관계 증진이 인권에 대한 규범적 비판과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 질타 및 안내와 병존할 수 있는 근거를 잠시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국가연합 구상의 문제는 더 전진적으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화가 ‘지속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차이의 인정과 다양성의 존중이 중요하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국가연합과 ‘녹색정치’는 만난다. 국가연합을 단순히 정치군사적 갈등 조정의 매개나 중앙통합적 국민국가로의 과도기 썸으로 보지 않고, 원래의 연방주의(federalism) 정신에 맞춰 더 많은 다양성과 차이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연루와 교호의 시공간으로 사유하는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또 평화와 통일이 하나의 행위로서 현상하는 것이 아니고, 형성 내지 구성되는 ‘과정’이라면, 그것은 이미 새롭게 만들어질 정치공동체 내 다양한 사람들의(‘인민(people)’) 서로 다른 요구와 이익, 가치와 지향, 기억과 경험이 발현되고 존중되고 소통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확장’이 아니라 ‘다양성’을 통한 ‘부유함’을 정치공동체 갱신의 출발로 삼으려고 했던 당시 독일녹색당 정치가들의 ‘생태국가연합’의 정치적 상상을 더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역사 과정에서 끊어진 평화(들)과 현실에서 단혀 버린 ‘녹색 사유(들)’를 잇는 과정에서 ‘녹색 평화(들)’가 개시될 것이다.

참고문헌

Archiv Grünes Gedächtnis

이동기, ‘서독 68운동과 독일정책: 민족좌파로서의 신좌파?’, 『독일연구』 17호, 2009. 6, 65-109.

이동기, ‘독일 분단과 통일과정에서의 탈민족 담론과 정치’, 『통일과 평화』 2호, 2009, 162-192.

이동기, ‘1989/90년 독일통일 과정 시 서독 좌파의 비판과 대안들’, 『서양사연구』 43집, 2010년 11월, 155~186.

Antje Vollmer im Gespräch mit Hans Werner Kitz. *Eingewandert ins eigene Land. Was von Rot-Grün bleibt* (München, 2006).

Baron, Udo: *Kalter Krieg und heißer Frieden. Der Einfluss der SED und ihrer westdeutschen Verbündeten auf die Partei „Die Grünen“*, (Münster, 2003).

Brandt, Peter: *Schwieriges Vaterland* (Berlin 1999).

Gallus, Alexander: *Die Neutralisten. Verfechter eines vereinten Deutschland zwischen Ost und West 1945-1990* (Düsseldorf, 2001).

Kuby, Erich: *Deutsche Schattenspiele* (München, 1988)

Lee, Dong-Ki: *Option oder Illusion? Die Idee einer nationalen Konföder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1949-1990* (Berlin: Ch. Links Verlag, 2010)

Markovits, Andrei S. & Philip S. Gorski, *The German Left: red, green and beyond* (Cambridge: Polity Press, 1993).

Notz, Anton: *Die SPD und der NATO-Doppelbeschluss: Abkehr von einer Sicherheitspolitik der Vernunft* (Baden-Baden: Nomos, 1991).

Scheffran, Jürgen: “Frieden und nachhaltige Entwicklung”, in: Hans J. Gießmann/Bernhard Rinke (Hg.), *Handbuch Frieden* (Wiesbaden: VS Verlag, 2011).

Schregel, Susanne: *Der Atomkrieg vor der Wohnungstür. Eine Politikgeschichte der neuen Friedensbewegung in der Bundesrepublik 1970-1985* (Frankfurt am Main: Campus, 2010).

Vollmer, Antje; “Tips für David, Plädoyer für eine ökologische Konföderation”, Blohm, Frank und Herzberg Wolfgang (Hg.), *Nichts wird mehr so sein, wie es war. Zur Zukunft der beiden deutschen Republiken* (Leipzig, 1990), pp. 117-125

Volmer, Ludger: *Die Grünen und die Außenpolitik-ein schwieriges Verhältnis* (Münster, 1998).

Volmer, Ludger: *Die Grünen. Von der Protestbewegung zur etablierten Partei-Eine Bilanz* (München: C.Bertelsmann, 2009).

Wünsch, Roland: *Das Ende der Alternative. Die Grünen in der Wiedervereinigung* (Bonn, 1995).

MEMO

MEMO

MEMO
